

시민운동 종합정론지

월간 경실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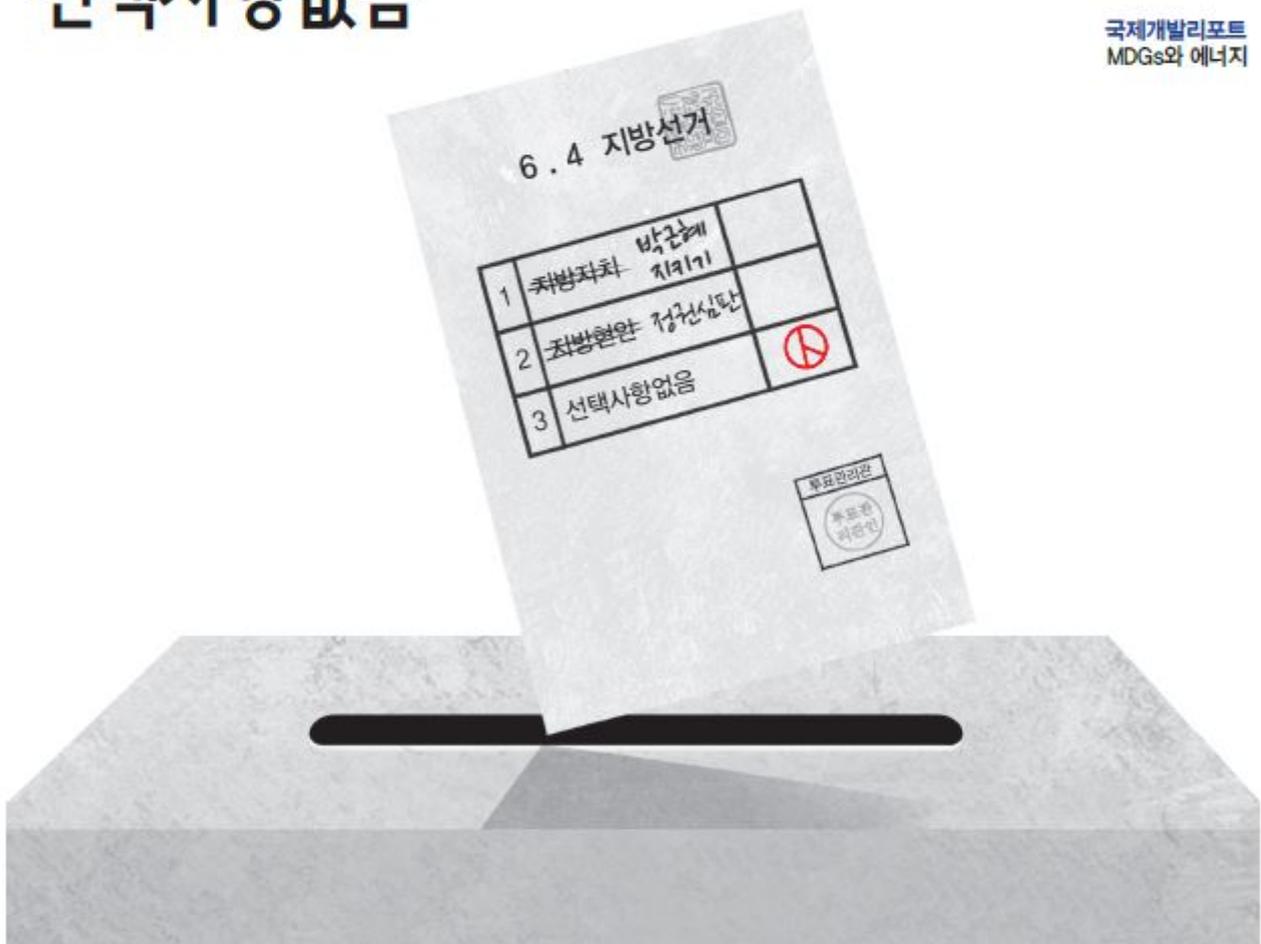
07
08 호
통권 141호 | 2014

국민의 결정은 '선택사항없음'

시사포커스 1
KT 개인정보유출 공익소송

통일마당
한미일 삼각 안보체제 너무나 위험하다

국제개발리포트
MDGs와 에너지




경실련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커버스토리
국민의 결정은 '선택사항없음'
지난 6월 4일, 여섯번 째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졌다. 지역의 이야기 대신 선거를 뜨겁게 달구었던 박근혜 수호론과 심판론의 싸움에서 결국 국민들은 그 누구의 손도 들어주지 않았다. 선거는 엉망이었지만 국민의 선택은 현명했다.



시민운동 종합정론지 2014_7, 8월호 | 월간경실련 통권 141호

경실련 | 공동대표 임현진 선월몽산 최정표 최인수 중앙위원회의장 박상기 상임집행위원장 김호균 정책위원장 채원호 사무총장 고계현
월간경실련 | 발행인 고계현 편집인 윤순철
편집기획위원 권오인 김삼수 김한기 남은경 윤철한 최예지
발행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110-809 서울시 종로구 동숭3길 26-9 전화 02)765-6400 팩스 02)741-8564~5
편집디자인 ㈜현대아트컴 인쇄 ㈜현대아트컴 1990년 5월 24일 등록 서울라10131 2014년 7월21일 발행

CCEJ(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26-9 Dongsung 3gil Chongro-gu, Seoul, Korea
Phone : 82-2-765-6400 Fax : 82-2-741-8564-5 http://www.ccej.or.kr

CONTENTS

도시사

10 마천루 - 21세기의 바벨탑 / 류중석

동승동칼럼

16 박근혜 정부 위기의 징후들 / 고계현

기획특집

- 19 6.4지방선거 평가
 - ① 2014 지방선거 경실련 투표 독려 및 정책 선거 캠페인 / 유애지
- 22 ② 문제의 원인이 아닌 해결자로서의 지방정치를 위해 / 김삼수
- 26 ③ 6·4 지방선거 평가와 지방자치 발전 방안 토론회 / 유애지

시사포커스

- 30 ① KT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 박지호
- 33 ② 호텔 건립 고용창출효과는 미미 / 오세형
- 36 ③ 병원 경영 적자인가? / 남은경

통일마당

40 한미일 삼각 안보체제 너무나 위험하다 / 김용수

안녕하세요? 회원님!

44 [인터뷰] 라윤흠 회원
"이제는 문학청년시절의 꿈을 찾아 시를 쓰고 싶다." / 최예지

경실련 사람들

46 [인터뷰] 김보라미 변호사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제일 좋은 시작" / 최예지



30 시사포커스 1
KT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40 통일마당
한미일 삼각 안보체제 너무나 위험하다

지역이야기

- 50 ① 6.4 지방선거 당선자 토크쇼 / 최윤정
- 54 ② 인천판 4대강으로 전략한 송도위터프론트 / 최혜자
- 58 ③ 화정지구 재건축 사업에서 드러난 광주시의 문제 / 김세현

문화산책

61 황홀과 슬픔의 공존 / 박지호

동승동 책방골목

- 64 지금 아이들에게 필요한 '관심' / 윤성권
- 65 혼자하는 여행의 예고편 / 이현아

국제개발리포트

66 MDGs와 에너지 / 정재원

회원기고

70 경실련과 함께하는 문화 유람, 켈쳐노마드를 마치며 / 안광수

편집자에게

72 "지방선거 특집, 서울 말고 지방도 비교했음 좋았을 것" / 최예지

회원게시판

76 소소한 것도 통하는 광장

경실련 일일보고

78 경실련 일일보고

참여하는 당신이 주인

80 신입회원 및 회원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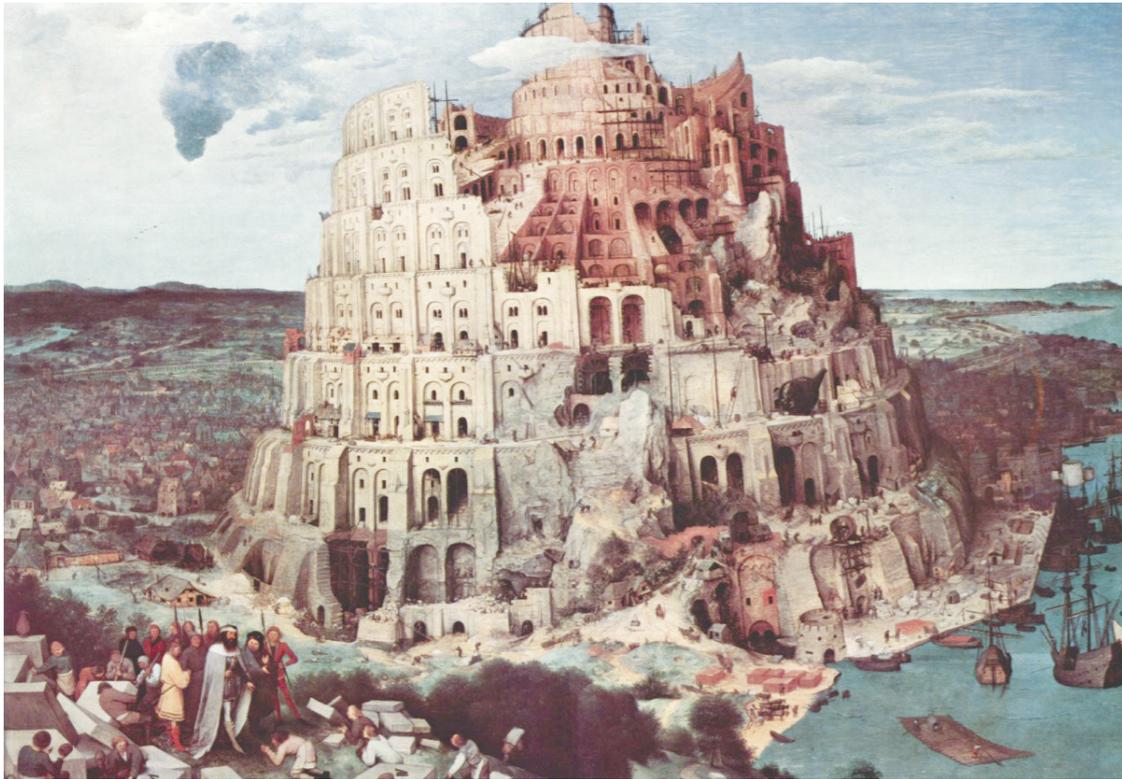
61 문화산책
황홀과 슬픔의 공존



66 국제개발리포트
MDGs와 에너지

마천루 - 21세기의 바벨탑

류중석
(사)경실련도시개혁센터 이사장
중앙대 도시공학과 교수



▲ <그림 1>
피테르 브뤼헬
(Pieter Bruegel
le Vieux)이 그린
바벨탑

구약성서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동쪽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 바빌로니아 신아르 지방 벌판에 자리를 잡고 살면서 성읍을 세우고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는 탑을 세워 이름을 날리고자 하였다. 하느님에게 가까이 다가가려는 인간의 욕망은 결국 하느님의 노여움을 사서 공사는 중단되고 인간은 여러 언어를 사용하는 종족으로 흩어졌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21세기의 바벨탑이라고 하는 마천루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우리나라 최초로 100층이 넘는 초고층 빌딩이 도시계획 심의를 통과하여 잠실에 건설되고 있지만 각종 안전사고와 지반 침하 등으로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다. 21세기의 바벨탑이라는 마천루 - 왜 우리들은 이토록 초고층 건물에 열광하는 것인가?

중세 성당들의 높이경쟁 - 아미앵과 보베 대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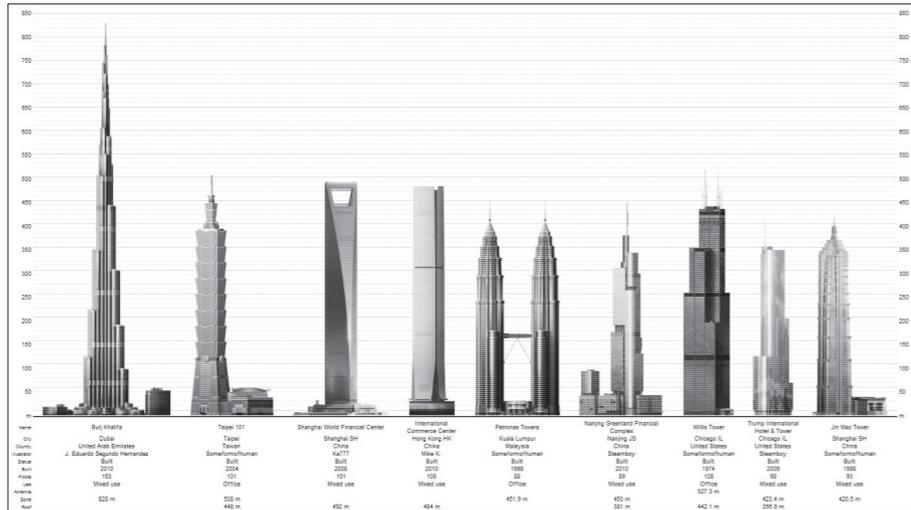


▲ <그림 2> 중세시대 높이경쟁을 주도한 아미앵 대성당(왼쪽)과 보베 대성당 (오른쪽)

바벨탑의 교훈을 쉽게 망각한 중세시대 유럽에서는 고딕성당을 통하여 신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욕망을 표현하였다. 중세시대에도 지금과 같은 높이경쟁이 있었다. 파리에서 북쪽으로 약 50km 지점에 있는 보베(Beauvais)마을과 100km 지점에 있는 아미앵(Amiens)마을은 성당 높이 짓기 경쟁을 시작했다. 1220년에 건설을 시작한 높이 42미터의 아미앵 대성당(Amiens Cathedral)을 이기기 위해서 5년 늦게 시작한 보베 대성당(Beauvais Cathedral)은 구조적인 문제를 무시한 채 무리하게 48미터의 높이로 건설되어 당시 유럽에서 가장 높은 성당이 되었지만 1284년 붕괴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었다. 그 이후에도 야심찬 증축공사가 계속되었는데 1573년에는 당시 세계 최고높이인 153m짜리 중앙타워가 무너져 공사가 중단되는 비운을 또다시 겪었다.

누가 누가 더 큰가? 세계 빌딩들의 키재기 경쟁

19세기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1885년 시카고에 세워진 10층짜리 홈 인슈어런스 빌딩이었다. 그러나 이 기록은 1929년 77층짜리 크라이슬러 빌딩이 완공되면서 깨진다. 크라이슬러 빌딩의 세계최고건물 기록은 2년이 채 지나지 않아 102층짜리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게 자리를 내준다. 미국 뉴욕에서의 초고층



▲ <그림 3> 세계의 마천루 현황 (출처: <http://skyscraperpage.com>)

경쟁은 세계를 제패하려는 미국의 자존심과 막강한 경제력을 대변해 주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초고층 열풍은 미국에서 중동과 아시아로 번져나갔다. 중동지역은 석유생산으로 인한 국부를 초고층 건축을 통해서 표출하였고 중국, 대만, 한국, 인도도 이 대열에 동참했다. 세계 10대 마천루 중 9개가 아시아 지역에 있고, 그 중 6개는 중국에 있다.

2012년 영국의 유력 일간지 인디펜던트(The Independent)는 아시아 지역에서의 마천루 열풍이 임박한 경제위기의 징조라는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 기사에서 바클레이(Barclays) 은행의 투자담당자들은 지난 140년간 마천루 건설과 경제 위기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이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일반적으로 마천루 건설이 증가하는 시기는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고, 은행의 대출이자율은 매우 낮아 경기에 대한 지나친 낙관주의가 팽배한 시기와 일치한다. 그러나 마천루 건설이 끝나는 시점이 되면 경기는 침체기로 들어서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1970년대 석유팽동 시기는 뉴욕의 세계무역센터, 시카고의 시어스 타워가 완공된 1972년~1974년 시기와 일치한다. 아시아에서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페트로나스 타워가 완공된 1997년에 경제위기가 불어닥쳤다.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마천루인 두바이의 부르즈 할리파가 2010년 완공되자 불황의 늪에 빠진 것도 우연이 아니다.

현재까지 완공된 건물 중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아랍에미리트연합 두바이시에 있는 부르즈 할리파(Burj Khalifa)¹⁾ 건물이다. 163층에 높이²⁾ 828m에 달하는 이 건물

은 오피스와 주거, 호텔로 구성된 복합건물이다.

우리가 흔히 마천루(摩天樓, skyscraper)³⁾라고 일컫는 초고층 건축물은 아직 학술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개념이다. 현재 통용되고 있는 개념은 세계 초고층 도시주거 협의회(CTBUH, Council on Tall Building and Urban Habitat)에서 제시한 높이 200m 이상 또는 50층 이상의 건축물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미 200m를 넘는 건물이 너무 많아져서 높이가 300m를 넘으면 “슈퍼탈(supertall)”, 600m를 넘으면 “메가탈(megatall)” 건물로 구분한다. 이제 높이가 1,000m를 훌쩍 넘어가는 건물이 등장하게 되니 새로운 분류가 필요한 시점이다.



▲ <그림 4> 현존하는 가장 높은 건물인 두바이 부르즈 할리파(Burj Khalifa, Dubai) 건물 전경 (출처: <http://meganclarke2011.wordpress.com>)

우리나라 마천루의 역사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말부터 100미터가 넘는 건물이 지어지기 시작했다. 대개 건물의 층수가 그대로 이름에 반영되어 31층짜리 31빌딩, 63층짜리 63빌딩 등으로 불렸다. 그만큼 높은 층수를 자랑하고 싶은 심리에서 그런 이름이 붙여진 것이다. 강남에서 가장 높은 주거용 건물이라는 타워팰리스(73층, 264m)는 부자주거의 상징이 되었다. 양재천 맞은편에 있는 포이동 266번지 판자촌과 대조되어 매스컴에 자주 오르내렸다. 2011년 완공된 부산 해운대의 위브더제니스(We've the Zenith) 타워(80층, 301m)를 시작으로 300m건물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 건물은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며, 주거용 건물만 따질 경우 세계에서 8번째로 높은 건물이다.

1) 이 건물은 초기에 부르즈 두바이(Burj Dubai)라고 불리웠으나 2008년에 완공되면서 이름을 부르즈 할리파로 고쳤다. 부르즈는 아랍어로 “탑”이라는 뜻이며, 할리파는 아랍에미리트 대통령 이름에서 따왔다. (출처: 두산백과사전) 이 건물의 이름은 다양하게 불려지는데, 영어식 발음으로는 “버즈 칼리파”, 아랍어식 발음으로는 “부르즈 할리파”이며, 이 글에서는 외래어심의위원회 권장 표기인 “부르즈 할리파”를 따른다.

2) 건물 최상층까지의 높이는 621.3m, 지붕까지의 높이는 828m, 첨탑까지의 높이는 829.8m이다. (출처: 위키백과)

3) 영어로 하늘(sky)을 긁는다(scrape)는 뜻을 가진 이 단어를 한자어로 번역하여 갈마(摩) 하늘천(天) 다락루(樓)로 표현하였다.



▲ <그림 5> 강남 부자주거의 대명사로 일컬어지는 타워팰리스(왼쪽)와 부산 해운대의 위브더제니스(오른쪽) 건물 전경 (출처: 위키피디아)

이제 2016년이 되면 우리나라 초고층 건축물 1등자리가 바뀐다.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인근에 건설중인 롯데월드 몰(Lotte World Mall, 속칭 “제2 롯데월드”)이 주인공이다. 1987년 구상을 시작하여 30년 만에 완공되는 이 건물은 123층에 높이가 555m로서 우리나라에서 높이 500m 건물시대를 여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연면적 86만평의 이 건물은 6성급 호텔과 백화점, 쇼핑몰, 문화·레저시설 등이 들어서 건물 자체가 하나의 도시라고 하기에 손색이 없다.

이 건물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승인 당시 공군 비행기의 작전경로상에 위치하여 유사시 군작전을 방해할 수 있다고 해서 논란이 되었다. 이뿐만이 아니라 공사가 시작된 이래 인근 석촌호수의 수위가 낮아져 지반침하 우려를 낳았고, 화재 사고, 폭발사고 등이 끊이지 않아서 초고층 건물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우려를 낳고 있다.

초고층 열풍 - 왜 초고층 건물을 선호할까?

초고층 건물은 아무나 지을 수 없는 첨단기술의 상징이다. 최근까지도 국토교통부의 국가 핵심 연구사업으로 초고층 건축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국가 핵심 연구사업을 통하여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줄여 과거 중동의 건설 시장을 주도했던 한국의 건설산업이 초고층 건설기술을 통하여 제2의 중흥기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시아와 중동에서 초고층 열풍이 부는 큰 이유 중의 하나는 국가 차원의 이미지 제고효과 때문이다. 내세울 것은 별로 없지만 돈이 많은 국가라면 초고층 건축을 통하여 세계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하다.

이와 같이 국가차원에서는 새로운 융합산업으로써 가치와 국가 이미지 고양효과를 우선적으로 내세우지만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초고층 건물이 주는 상징적인 가치와 이에 따른 부동산의 금전적 가치가 우선한다. 부동산 경기

가 좋을 때 초고층 건축이 증가한다는 통계적 사실은 그만큼 부동산 거품이 끼어 있을 개연성을 전제로 한다. 경기가 좋을 때는 고급화된 주거, 오피스, 호텔의 수요가 쉽게 창출된다.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서 부동산으로 몰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기가 나빠지면 고급 주거나 오피스에 대한 수요가 제일 먼저 줄어든다.

초고층 건물의 명암 - 알려지지 않는 사실들

초고층 건축 신봉론자들은 말한다. 초고층 건물에 대해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는 기술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영화 타워링에서 보는 화재 정도는 이제 유비쿼터스 첨단기술로 해결 가능하고, 지진에 대한 대비도 완벽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초고층 주거건물에서 높은 층으로 갈수록 바람의 압력때문에 창문을 제대로 열지 못해서 강제환기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은 감춘다.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건설경제학에서는 이미 초고층 건물이 에너지 과소비의 주범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있다. 도시 전체의 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 있는 고밀도의 콤팩트 시티(compact city)가 가지는 장점은 분명히 있지만, 고밀도라고 해서 꼭 초고층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초고층 건물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는 괴물덩어리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기술적인 논란은 차치하고서라도 시민들에게는 거주성 측면과 도시문화라는 측면에서 초고층을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하다. 초고층이 주는 위압감을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셋백(setback), 철골과 유리로 싸여진 높은 건물의 삭막한 환경을 보완할 수 있는 적절한 녹지와 오픈 스페이스, 주변을 압도하지 않고 잘 어울리면서 주변을 배려하는 설계, 이웃과 함께할 수 있는 용도 - 이러한 관점이 중요하다. 좁은 국토를 넓게 쓰는 비결이 꼭 초고층에만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낮지만 밀도를 높여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배타적 공간을 배려적 공간으로 바꾸는 지혜가 필요하다. **정**



▲ <그림 6> 2016년 우리나라 최고층 건물이 될 예정인 롯데월드 몰(Lotte World Tower & Mall) 건설현장 (출처: 위키피디아)

박근혜 정부 위기의 징후들



박근혜 정부가 위협해 보인다. 국정 성과는커녕 큰 사고만 치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들이 이십전심으로 서로 확인되며 떠돈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길가다 가벼운 교통사고만 발생해도 '모두 노무현 탓'이라며 대통령 리더십이 희화화된 시절이 있었다. 모든 문제를 '박근혜 탓'이라고 지적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때보다도 더 심각한 위기의 징후들이 보인다. 뭐라 해도 노무현 정부시절은 대통령 리더십 스타일에 대한 논란은 있었지만 국정장악력이나 예측 가능성은

존재했다. 그러나 지금 박근혜 정부는 '왜 무엇 때문에 대통령이 되었을까' 하는 근본 의문부터 '솔직히 정상적으로 임기나 제대로 마무리 할 수 있을지' 불안감이 지배한다. 정부 출범 17개월 만에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인사(人事)는 만사(萬事)라고 했다.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인사가 시작과 끝일 정도로 중요하다는 뜻이다. 조그마한 조직에서도 인사를 잘못해 놓으면 성과는 차지하고 조직의 통합성이 무너진다. 특히 지위에 맞지 않는 사람이 와서 엉뚱한 실수라도 하면 그 휴유증이 상상을 초월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초대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윤창중의 성희롱 사건이 이를 웅변한다.

박근혜 정부는 17개월만에 10명의 고위공직자가 인사 도중 낙마했다. 세월호 사건으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정홍원 총리는 후임자가 2명이나 낙마하여 다시 재직하는 코미디 같은 일도 발생하였다. 어디 그뿐인가.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태연히 하는 등 자질시비가 지적된 정성근 문광부장관 후보자는 청문보고서가 미채택 되었음에도 임명을 강행하려다 불륜 문제가 제기되자 하루아침에 자진사퇴시키는 일도 생겼다. 임명된 장관 중에서도 도덕성은 물론이고 자질시비가 제기되는 사람이 어디 한둘인가. 시중에서는 '장관후보자를 꼭 문제 있는 사람들만 찾아서 고른 것 같다'는 비아냥이 있음에도 대통령은 오직 국회 인사청문회를 뚫는다.

이쯤 되면 인사참사(人事慘事)라 해야 하는데 단순히 인사검증의 문제라기보다는 근본적으로 대통령의 사람을 보는 눈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어떤 사람을 써야 할지에 대한 자기 기준이 없고 오로지 자신이 좀 알거나 과거 주위에서 YES만 했던 사람을 낙점하는 듯싶다.

인사문제도 심각하지만 정부 내 시스템과 소통도 엉망인 듯하다. 최근 새로 출범한 2기 내각이 정부 부처 내 국·실장 인사만이라도 청와대가 할 게 아니라 장관에게 위임해줄 것을 요구한 모양이다. 부처장관이 산하기관도 그렇지만 심지어 해당 부처의 국·실장 인사권도 행사하지 못하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장관이 부처 내에서 업무장악도 못할뿐더러 식물장관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그러니 장관들이 업무에 대한 책임의식 없이 대통령과 청와대만 바라보고 지시사항만 받아쓰는 무능한 장관이 되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후임 장관도 임명되지도 않고, 제1차관도 공석인 상황에서 류진룡 문화관광부 장관을 면직했다. 후임자도 없는데 장관 면직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류 전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사건에 대한 책임으로 내각 총사퇴를 주장하고, 부처 국·실장과 산하기관 인사를 놓고 청와대와 대통령 눈 밖에 나서 그랬다는 것이다. 용기 있게 쓴소리를 하는 사람은 신속히 쳐내고 아부나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 하자에도 불구하고 국회 청문회나 국민여론은 아랑곳 하지 않고 끝까지 임명을 강행하려는 대통령에 대해 국민들은 어떤 희망을 갖겠는가.

정부 정책도 갈피를 잡을 수 없다. 아마 박근혜 정부는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은 정책 담론을 정부차원에서 제시했다. '국민대통합', '비정상의 정상화', '창조경제', '창조복지', '국가개조', '규제혁파', '지하경제 양성화' 등등 말만 무성했지 뭐하나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용두사미다.

다른 한편에선 S&P나 피치 같은 국제신용평가기관이나 국내 경제기관과 전문가들의 비판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10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 위험이나 금융기관 건전성 하락은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정책적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DTI(총부채상환비율)나 LTV(주택담보인정비율) 완화를 통해 경제활성화를 위한다며 금융기관에서 돈 빌려 부동산을 사라고 조장하고 있다. 거품경제나 부채경제를 위한 정책은

활성화는커녕 결국에는 남미나 유럽 일부 국가처럼 경제파탄으로 귀결될 뿐이다.

국정원 개혁이나 세월호 문제 같은 정치적 사안에도 정치적으로 불리할 때는 눈물도 흘리고 국민여론대로 다 할 듯 하지만 조금만 숨 돌릴 수 있는 상황만 되면 표변한다. 그래 놓고 다른 쪽에선 법치를 운운하며 국민들에게 법 준수를 강요한다. 자신들은 법과 정부역할을 방기해놓고 국민들에게만 이를 강요한다면 이는 민주적 정부라 말할 수 없고, 과거 군사독재 정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에 다름아니다.

정부가 대통령이 모범을 보여야 국민들도 신뢰하고 존경하며 이를 따른다. 박근혜 정부는 이대로 가면 '탄생하지 않았어야 할 정부'라는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오죽하면 보수신문조차 세월호 사건 직후 불투명한 8시간의 대통령 일정을 놓고 숨겨놓은 비선과의 접촉 운운하며 향간의 야릇한 소문을 여과없이 드러내는 상황까지 되었을까.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비판적인 국민여론에 귀 기울이고 청와대와 내각 등 대통령 주변을 일신해야 한다. 술한 인사파문에도 김기춘 비서실장을 끼고도는 이유를 모르겠고 파편화된 정부부처도 일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시키지 않는지 모르겠다. 독선과 아집에 휩싸야 끝까지 간 정권은 결국 국민적 버림을 받았던 우리 헌정사의 교훈을 박근혜 대통령이 되새겨 봐야 할 시점이다. **경**

후보선택도우미와 함께 정책선거를 기대해본다

2014 지방선거 경실련 투표 독려 및 정책 선거 캠페인

유애지 정치입법팀 간사
aejiyu@ccej.or.kr



6·4 지방선거에서는 전 국민을 슬픔에 빠지게 한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이전과 같은 선거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었다. 정상적인 선거운동이 거의 진행되지 않았고, 각 정당의 경선 또한 미루어지거나 조용히 치러졌다. 계속되는 애도의 분위기 속에 경실련의 투표 참여 독려 및 정책선거 캠페인 역시 예년과 달리 조심스럽고 조용히 진행되었다. 유권자들의 이목을 끌고 축제와 같이 즐기는 캠페인 대신 정책을 기준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후보선택도우미 프로그램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방식으로 캠페인을 진행했다.

경실련 후보선택도우미는 유권자들이 후보선택도우미 사이트에 접속해 자신이 투표할 지역을 선택하고, 주어진 20개의 정책 질문에 자신의 의견을 답하면 후보



▲ 5월 29일 광화문에서 진행한 투표 참여 독려와 정책 선거 캠페인



▲ 5월 30일 대학로



▲ 5월 31일 북한산

들과의 정책 성향 일치도를 알려주는 프로그램이다. 경실련은 유권자의 선택을 돕기 위해 분야별 주요 현안과 각 지역의 현안에 대해 6·4 지방선거 17개 지역 광역단체장 후보들과 3개 지역 기초단체장 후보들에게 입장을 물었고, 후보들에게 각각 50여개 문항에 대한 답변을 받아 그 중 유권자들이 꼼꼼히 따져봐야 할 질의 20개를 선정해 유권자들이 후보들의 정책을 보고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지방선거 기간 동안 많은 시민들이 거리에서 직접 경실련 후보선택도우미를 활용해 자신과 정책 성향이 맞는 후보를 알아보았다.

경실련은 이번 지방선거 기간 동안 총 4회에 걸쳐 거리에서 투표 참여 독려와 정책 선거 캠페인을 진행했다. 첫 번째로 광화문에서 진행한 캠페인에는 점심시간을 맞아 거리로 나온 직장인들의 참여가 많았다. 이들은 대부분 동료들과 함께 삼삼오오 모여 후보선택도우미를 통해 자신과 맞는 후보를 찾아보며 투표 참여를 다짐했다.

대학로에서 진행한 캠페인에는 연극을 보러 오거나 나들이를 나온 청년들의 참여가 많았다. 젊은층의 정치 관심도가 낮고 투표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인식과 달리 어느때보다 많은 시민들이 후보선택도우미에 관심을 갖고 참여했다. 많은 시민들은 자신과 후보들의 정책 성향 일치도를 보며 신기해하기도 하고,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등산객이 많은 북한산에서의 캠페인에서는 중장년층의 시민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다. 태블릿PC나 스마트폰 활용이 비교적 능숙하지 않은 시민들이 많았지만 캠페인 진행자들의 설명을 들으며 투표 참여와 정책 선거를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선거 하루 전 캠페인은 서울역에서 진행했다. 다양한 지역의 시민들을 만날 수 있는 서울역이야말로 지방선거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에 안성맞춤인 장소였다. 전국 각지로 떠나거나 다시 서울로 돌아오던 많은 시민들이 잠시 걸음을 멈추고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날 투표 참여를 약속하며 발걸음을 옮겼다.

정책 실종 선거, 우리 모두 성찰해야

이번 지방선거 기간에는 예기치 못한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적극적인 투표 독려 캠페인을 진행하지 못했던 것이 많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하지만 캠페인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의미 있었다. 광화문에서 만났던 직장인들, 대학로에서 만난 청년들, 북한산에서의 중장년층, 서울역에서 만난 다양한 지역의 시민들은 모두 투표를 다짐하며 정책 없는 선거에 대해 정치권에 쓴소리도 잊지 않았다. 민생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선거인만큼 어느 때보다 후보의 공약과 정책을 면밀히 살피고 투표해야 하지만 이번 6.4 지방선거는 정책은 실종되고 각종 비방이 난무하는 네거티브 선거로 진행됐다. 그래서 시민들은 정책보고 투표하기가 더 힘들었다. 실제 선거 기간 동안 경실련에도 지역 후보들의 정책을 알기 힘들다는 시민들의 불만이 이어졌다. 사전투표 제도 시행 등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노력이 있었지만 투표율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던 것에 대해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의 성찰이 요구된다. **경✓**



▲ 6월 3일 서울역

공간경관

2014년 7월호

문제의 원인이 아닌 해결자로서의 지방정치를 위해

김삼수 정치입법팀 팀장
peace@ccej.or.kr



7월 1일 지방자치 민선 6기가 출범했다. 민선(民選)도 이제 20년이 넘었다. 당선인들은 성년이 되는 만큼 지역을 복원하고, 지역문제를 지역의 시각에서 해결하는 등 지방자치를 새롭게 정립해야할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지역이 실질적인 권한을 가져야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가 않다. 지방사무는 30%에 불과하고, 지방세 비중도 20%에 머물고 있다. 중앙정부는 여전히 지방으로의 권한이양을 꺼리고 있고, 지방재정의 중앙 의존도는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지역발전과 관련된 문제를 지방정부가 스스로 결정하고, 필요한 재원을 스스로 마련하고 자신의 책임 하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의 미래는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의지와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 법과 원칙을 지키고, 전신성·선심성 정책이 아닌 소신행정을 펼쳐야 한다. 정실 인사나 논공행상이 아닌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인사에 나서야 한다.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안전망을 체계화해야 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민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중앙집권적 사고방식을 지방분권적 사고방식으로

지난 6·4지방선거는 여당의 '박근혜 정부 수호론'과 야당의 '박근혜 정부 심판론'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또 다시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라는 본래 의미가 사라졌다. 중앙정치의 과도한 개입으로 지방의제와 정책이 사라지면서 풀뿌리민주주의도 위축되었다. 동시에 주민복리와 지역발전이 뒷전으로 밀리면서 생활정치 영역에서의 정당공천 폐해를 다시금 확인하는 선거였다.

이번 선거에서도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정책과 공약은 실종되고, 후보 간 사실 왜곡과 비방, 고소·고발, 흑색선전 등 시대에 역행하는 네거티브 공방으로 과열·혼탁 양상이 극에 달했다. 6·4 지방선거 기간에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건은 397건, 수사의뢰는 105건으로 각각 나타났다. 유권자들 역시 세월호 참사에 따른 국민적 애도 분위기 속에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고, 이는 올바른 판단과 합리적 선택에 제약을 가져왔다.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원 705명 중 재선에 성공한 의원은 315명인데, 이중 46명(15%)은 지난 회기 4년간 대표 발의한 조례가 단 한 건도 없고, 시·도정 질의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의원도 82명(26%)으로 나타났다.

지역 풀뿌리의 연계조직을 자처했던 녹색당은 22명의 후보를 냈지만 한 명의 의원도 당선시키지 못했다. 진보정당으로 분류되는 정당의 당선자수는 2010년 169명에서 올해 55명으로 크게 줄었다. 마포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역당을 표방했던 '마포파티'는 4명의 후보 모두 낙선했다. 주민들이 참여하는 생활정치는 세월호 심판론처럼 큰 이슈가 나올 때 정당정치에 밀려나기 일쑤다. 그러나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삶을 위한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운동은 계속될 것이다.

성숙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주체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집권적 사고방식을 지방분권적 사고방식으로



로 바꾸는 의식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주민이 직접 의제를 만들고 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을 주도하지 못한다면 자치와 분권도 요원할 수밖에 없다. 주민들 스스로 지방행정과 지방정치 실천과정에서 지방정치를 살리고 중앙정치의 영향력을 배제하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지탄의 대상이 아닌 헌신하는 민선 6기가 되어야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광역단체장 17명, 시·군·구 기초단체장 226명, 광역의원 789명, 기초의원 2898명, 광역자치단체 교육감 17명,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 5명 등 모두 3952명의 지방자치 대표를 뽑았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 제한적이거나 ‘안전 이슈’가 부각되기는 했지만, 제대로 된 사전검증 없이 급조한 부실공약이나 실현가능성이 낮은 과대포장 된 공약을 제시하는 경우가 여전했다. 지방자치 취지에 맞는 지역주민들의 생활밀착형 민생 정책들은 실종되고, 이미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예정중인 정책을 자신의 공약으로 바꿔치기 하고, 지방정부의 역량만으로는 실현하기 어려운 공약을 남발하기도 했다. 또한 체계적인 채용조달 방안도 없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만을 안겨주는 포퓰리즘 공약들도 상당했다.

그동안 적지 않은 단체장들과 의원들이 선거 과정에서 내세운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무능력한 모습으로 주민들의 지탄을 받았다. 또한 이권사업과 인사 청탁 등 부정과 비리로 사법처리를 당한 일도 부지기수였다. 이번 선거도 이러한 우려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얼마나 정직하고 유능한 일꾼이 뽑혔는지는 향후 4년을 지켜봐야 한다. 우선 단체장과 의원들은 주민을 위해서 무엇이 최선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를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지금이라도 당선자들은 상대후보의 좋은 정책과 공약, 주민의 요구와 욕구를 받아안아 다시금 자신의 정책과 공약을 차분히 가다듬어 지역발전을 위한 미래상을 제시해야 한다.

민선 6기가 시작되면서 단체장들은 취임식 대신 민생현장을 방문하거나 일선 봉사에 나서는 등 세월호 참사의 추모와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조용하고 겸손하게 업무를 시작했다. 그러나 광역·기초의회 전국 곳곳에서는 의장과 상임위원장 등의 선임을 둘러싼 갈등이 첨예화 되었다. 성실한 입법·정책 활동을 통한 ‘집행부 견제’라는 지방의회 고유 역할을 망각한 채 ‘감투’에만 혈안이 되었다는 문제제기가 거세다. 민선 6기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여야를 떠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야당과의 연정 제안과 이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의 호응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민들은 세월호 참사를 통해 책임과 능력을 가진 단체장과 의원이 지역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똑똑히 보았다. 단체장들은 주민과의 소통이 중요하고 일자리 창출과 복지 확대 등 주민들의 편에 서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의원들 역시 정당간의 이해관계에서 발생하는 정쟁을 최소화하고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로 책임정치에 나서야 한다. 권력에 취해 지방행정을 농락하고, 독단, 횡포, 독선으로 비난과 지탄의 대상이 되는 단체장과 의원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기대한다. 주민 생활을 구석구석 살피고 현장의 의견을 들으면서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민선 6기로 기억되기를 바란다. 

지역자치

2014년 7. 8월호

아무도 고르지 않은, 아무도 선택 받지 못한 선거

6·4 지방선거 평가와 지방자치 발전 방안 토론회

유애지 정치입법팀 간사
aejiyu@ccej.or.kr



▲ 6.4지방선거 평가와 지방자치 발전 방안 토론회 현장

선거 다음 날인 6월 5일 오전, 경실련은 '6·4 지방선거 평가와 지방자치 발전 방안 토론회'를 개최해 6·4 지방선거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지방자치 발전 방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기우(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소순창(건국대 행정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채원호(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와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트실천본부 사무총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는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후보가, 인천시장에

는 새누리당 유정복 후보, 경기도지사에는 새누리당 남경필 후보가 당선되었으며 부산에서는 새누리당 서병수 후보가 무소속 오거돈 후보와의 치열한 접전 끝에 당선되었다. 제주도지사 선거에서는 큰 표차이로 새누리당 원희룡 후보가 당선되었으며, 대전시장에 새정치민주연합 권선택 후보, 충남도지사 새정치민주연합 안희정 후보가 당선되는 등 전국 17개 시·도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8곳, 새정치민주연합이 9곳에서 승리했다.

후보들의 6.4 지방선거 공약 분석

발제를 맡은 소순창 교수는 먼저 이번 선거에서 진행된 경실련의 광역단체장 후보 공약 평가를 바탕으로 후보들의 공약을 정책유형별로 분석했는데, 각 후보가 제시한 전체 60개의 공약을 대상으로 봤을 때 환경 중시 공약보다 개발 위주 공약이 2배 이상 많았다고 밝혔다.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은 대부분의 개발 공약들이 국비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를 하겠다면서 중앙 정부의 돈을 끌어와서 지방정부의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은 지방자치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는 혹평이 이어졌으며, 이에 후보들의 공약을 평가 할 때, 이 공약을 위해 국비가 아닌 지역 주민의 도움과 지역의 재정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와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유권자들도 지역의 사업비를 국비지원에 기대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을 위해 이러한 공약이 실행될 때 내가 얼마나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공약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순창 교수는 분배 공약보다 성장 공약이 2배 많았는데, 서울시와 대전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분배보다 성장정책에 더욱 치중하고 있었고, 지역주민에 대한 복지 공약은 11개로 전체 60개 중 18% 수준이었으며 행정혁신을 위한 공약은 단 3개에 그쳤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는 세월호 참사 이후 후보들이 안전공약을 핵심공약으로 선택하면서 이러한 공약들이 후순위로 밀려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더불어 이번 선거는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유세차와 확성기 등을 동원한 시끄러운 선거 대신 조용한 선거가 치러졌으며, 세월호 참사로 미뤄진 각 정당의 공천 일정에 따른 짧은 선거기간 등으로 현직 프리미엄이 크게 작용한 선거로 평가되었다. 또한 안전 이슈가 지역 이슈로 부상했으나, 여전히 정부 심판론과 같은 중

양의 이슈와 중앙 정당에서 전략 공천된 중앙의 인물에 의한 인물 선거가 치러지면서 지역이슈가 부상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있었지만, 유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이 제한된 상태에서 어쨌든 유권자들에게 ‘박근혜 살리기 vs 박근혜 심판론’이라는 선택의 근거는 제공했다는 양면성이 있다는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의 의견도 있었다.

또한 토론자들은 앞으로의 선거에서 정당의 좀 더 책임 있는 역할을 요구했다. 채원호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는 무엇보다 이번 선거에서 정당들이 보여준 공천 행태는 전략이 아닌 정략 공천이었다고 혹평하며, 이러한 공천 행태가 지역 정치를 중앙에 예속화시키는 원인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정당은 후보에게 정책선거를 위한 지원을 해주는 것은 물론, 공천 시 후보자가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검증도 철저하게 해야한다고 요구하며 과연 각 정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 역할을 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지방선거 후보 등록자 8962명 중 전과 기록이 있는 후보는 3506명에 달했다.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선거는 엉망이었으나 유권자의 판단은 냉철하고 현명했다’는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의 평가도 있었다. 정당의 무책임, 무능함이 극에 달했던 선거임에도 유권자는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는 7월 보궐선거까지 마지막 기회를 주었고, 비리가 있는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심판했으며, 진보교육감 다수 선출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경고 시그널을 잊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반면 정치권의 네거티브 공방이 선거를 엉망으로 만들었던 것을 지적하며 우리 선거문화가 앞으로는 서로 주장을 얘기하지만 공존할 수 있는 선거,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인정할 수 있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정치권과 사회 각계에 주문했다.

아무도 선택 받지 못한 지방선거

결과적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느 당도 전패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여당과 야당 모두 실력과 실적에 비해서는 괜찮은 성적표를 받은 셈이지만 결과적으로 어느 누구도 이기지 못한, 유권자들이 아무도 고르지 않기로 선택한, 아무도 선택 받지 못한 선거로 평가되었다. 표면적으로는 새누리당이 8개 지역, 새정치민주연합이 9개 지역에서 승리했지만, 각 당의 전통적 강세 지역인 경상도와 전라도 지



▲ 발제를 맡은 소순창 교수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발 공약과 성장 공약이 환경과 분배 공약보다 많았다고 분석했다.

역을 제외하면 누구의 손을 들어줄 수도 없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충청과 강원 지역에서 새누리당을 이겼지만 수도권에서 인천과 경기 지역을 새누리당에 내주었고, 서울시장 선거 역시 정당의 힘 보다는 박원순 후보 개인에 의한 당선으로 해석된다. 새누리당 역시 인천시장과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이겼지만, 경상도를 제외한 지역에서 모두 졌고 유일하게 당선된 제주도지사 선거 역시 새누리당의 힘보다는 원희룡 후보 개인의 인물에 의한 당선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정치권이 이번 선거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고 행동하는지에 따라 다음 선거에서 심판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사회를 맡은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선거가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가 강조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종되어버린 선거’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언론, 정치권에 여러가지 생각할 것을 준 선거였다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선거의 의미를 이 자리에서 모두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이번 지방선거가 주는 교훈을 우리 사회가 잘 새겨야 할 것이라고 밝히며 토론회를 마무리하였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기업의 안일하고 이기적인 인식 때문이다

경실련, KT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박지호 소비자정의센터 간사
jhpark@ccej.or.kr



지난 3월 약 1,600만 KT 가입자를 충격에 빠뜨린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다. 1,200만 건, 982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다. KT는 2년 전인 870만 명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바 있어 그 충격은 배가 되었다.

이후 3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회장의 말 뿐인 공식사과만이 있었다. 피해 고객을 위한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오히려 책임이 없다며 KT 해지를 원하는 피해 고객들에게 해지위약금까지 부과하는 뻔뻔함을 보였다.

KT의 피해자를 무시하는 행태

KT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의 분노는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의 공익소송으로 모여들었다. 약 3개월의 준비과정을 거쳐 지난 6월 26일 경실련은 KT의 잘못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묻고자 피해자 2,796명이 참가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금은 1인당 100만 원, 총 27억 9,600만 원에 달한다.

오늘날과 같이 정보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개인정보가 중요한 경쟁력이 되면 기업은 돈이 되는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한다. 서비스나 콘텐츠 개발 노력보다 이벤트나 혜택을 빌미로 개인정보 수집에 몰두했다. 기업은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사유화하고 상품화한 것이다.

하지만 자신들의 이익에만 몰두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투자는 게을리 했다. 그 이유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직간접적 이익이 유출사고로 인한 불이익에 비해 더욱 거대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다보니 수많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해도 기업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

피해자인 소비자들의 희생만 강요되고,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원칙은 행정편의나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철저히 무시됐다. KT 고객 개인정보 유출은 물론 반복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잘못된 사회적 환경과 더불어 기업의 안이한 개인정보 인식, 허술한 보안시스템이 만들어낸 결과인 것이다.

KT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지난 2012년도 5개월에 걸쳐 8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하지만 사회적 비용부담이 크지 않아 보안 강화 노력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결국 이들의 안일한 인식은 매우 초보적인 해킹으로 1년여 간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에도 인지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반복적인 비정상적 접근을 차단하지 못했고, 개인정보도 암호화되지 않았다. 말 그대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고 심지어 신경도 쓰지 않은 것이다. KT는 “본인확인기관”으로 더 많은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특혜를 부여 받은 만큼 정보보호 의무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이 보인 행태는 정반대였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KT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한다

비록 3,000여명에 조금 못 미치는 피해자들이 공익소송에 참여하였지만, 1,000만여 명에 달하는 피해 고객들의 눈물이 닳아지도 불안이 해소되지도 않고 있다.

KT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더불어 보상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그간 보여 왔던 적반하장격 해지위약금 부과를 중단해야 한다. 그들의 약관에 ‘회사의 귀책사유인 경우’ 위약금을 면제토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피해 고객들은 물론 모든 소비자를 무시하는 부당한 처사이다.

주간경향

2014년 7월호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경실련이 소송을 제기한 6월 26일 KT에 대해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미비 등 관련법 위반으로 과징금 7,000만 원, 과태료 1,5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또한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관리적 보호조치를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명령했다. 비록 피해 고객들이 공감할만한 처분은 아니지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기업의 과실임을 인정한 만큼 이번 조치가 갖는 의미는 크다.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목소리를 내는 소비자

‘이미 내 개인정보는 다 유출됐는데 뭐’ 라는 생각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팽배하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우리의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

집하고 마구잡이로 활용하는 기업들이 바라는 생각이다. 그들은 피해에 둔감하고 조용한 소비자들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향후에도 단 한 명의 피해자라도 더 피해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고, 기업들이 자신의 잘못에 명확히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모든 합법적이고 강력한 방법으로 대응을 해 나갈 것이다. 경실련이 제기한 KT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같이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목소리는 기업들에게는 분명 크나큰 부담이 된다. 이러한 강한 행동을 통해 앞으로 유사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들이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이익보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부담을 느끼도록 해야만 한다. **경**



학교 옆 호텔 지어 생기는 일자리는 대부분 열악한 임시 일용직 뿐

호텔 건립 고용창출효과는 미미

오세형 도시개혁센터 간사
dipsec@ccej.or.kr



숙박업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전체근로자 평균의 75%

2013년 전체 근로자의 월별 총근로시간은 176.3시간, 총 근로일수는 20.7일, 월급여액은 266만 원이다. 숙박업의 경우 총근로시간은 190.3시간, 근로일수는 22일, 월급여액은 199만 원이다. 총 근로시간은 숙박업이 14시

박근혜 정부는 고용창출과 관광산업 활성화란 명목으로 학교주변 호텔건립 추진을 시도하고 있다. 학교주변 호텔건립 추진을 찬성하는 정부와 전경련, 호텔협회, 여행협회 등에서는 관광객 증가에 대비한 호텔객실 부족과 고용창출효과를 추진 이유로 꼽고 있다. 특히 정부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15개 호텔 3000여 객실이 추가로 건립될 수 있어, 1조 원의 경제효과와 2만5000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렇다면 학교주변에 호텔건립을 허용하면서까지 늘어날 일자리는 과연 어떤 일자리일까?

간이 더 많음에도, 숙박업의 월 급여액은 전체근로자 평균의 75.1%에 불과하여, 타 업종에 비해 임금수준이 월등히 낮았다. 더군다나 100만 원 미만의 저임금 근로자 비율 또한 33%나 되어 숙박업 근로조건이 타 업종에 비해 매우 열악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표1> 2013년 전체근로자, 숙박 및 음식점업 임금비교(월 기준)

	전체업종 근로자 (A)	숙박업 (C)	비율 (C/A)
총 근로시간 (시간)	176.3	190.3	108%
총 근로일수 (일)	20.7	22	106%
비율(%)	266.0	199.8	75%

자료 : 고용노동통계 (금액은 백 단위 반올림 기재)

시사포커스 1

2014년 7. 8월호

호텔업 근로자의 주요 직종별 임금현황도 대체로 열악하다. 언론이나, 드라마 등을 통해 비춰진 화려한 ‘호텔리어’가 모든 호텔 종사자 같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 보면 그런 경우는 매우 적다. 실제 고강도 노동을 해야하는 호텔업 내의 룸 어텐던트, 고객지원, 세탁실 등의 직종의 경우, 상대적 단순 업무 등을 고려하더라도 낮은 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다.

숙박업 임시·일용직 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79만 원으로, 숙박업 전체 근로자 임금의 36%에 불과

숙박업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79만원 정도로 숙박업 전체 월평균 임금총액의 36%에 불과하였다. 또한 숙박업내 상용임금총액¹⁾과 임시일용임금총액²⁾의 차이는 165만원 정도로 현격하게 나타났다.

<표2> 2013년 전체근로자와 숙박업 임시일용직 월평균 임금 총액

산업별	규모별	전체임금 총액a (만 원)	상용임금 총액 (만 원)	임시일용직 임금총액b (만 원)	임시일용직 임금 비율 (b/a)
전체	5인 이상	311.1	329.9	137.7	44%
숙박업	5인 이상	220.4	244.2	79.4	36%

자료 : 고용노동통계 (금액은 백 단위 반올림 기재)

호텔업이 포함된 숙박 및 음식점업의 고용형태는 임시·일용직 비율이 79.2%로 타 업종에 비해 매우 높아

호텔업이 포함되는 숙박 및 음식점업의 임금 근로자 중 임시 일용직 비율도 전체 근로자에 비

하여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전체근로자 임시·일용직 비율은 35.8%이나, 숙박 및 음식점업의 임시 일용직 비율은 79.2%로 전체근로자 임시·일용직 비율의 2.2배에 달했다.

<표3> 2013년 전체근로자와 숙박 및 음식점업 근로자의 고용 형태별 비율(%)

	상용	임시·일용
전체근로자	64.2	35.8
숙박 및 음식점업	20.8	79.2

자료 : 통계청(2013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경영자의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입장에서라도 최소한의 노동유연성은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유연성 확대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해고된 경우에도 일정기간 안정적인 수준의 임금 보장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노동유연성 강화는 곧 근로자들의 생존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숙박업도 임시·일용직 근로자와 상용임금 근로자 간의 임금 편차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더욱이 임시·일용직의 비율도 매우 높아, 해당 업종 근로자들은 불안한 근로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 숙박업 및 음식점업의 임시·일용직 비율이 79.2%, 숙박업 임시·일용직 임금은 월평균 79만원 밖에 되지 않아,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추진해 늘어나는 일자리는 매우 열악한 일자리임을 추정할 수 있다.

1)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무기) 및 1개월 이상 근로계약 형태 근로자의 정액, 초과, 특별급여 등을 합한 금액.
2) 1개월 미만의 근로계약형태 근로자의 정액, 초과, 특별급여 등을 합한 금액.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고용창출효과를 미화시키면서까지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추진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가 주장하는 호텔건립으로 인한 1조 원의 경제효과와 2만5000명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산출근거와 일자리 수준(임금, 고용형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국민들에게 밝혀야 할 것이다.

경복궁 옆 옛 미대사관(송현동) 부지 호텔건립추진은 꼭 저지해야

정부는 관광활성화를 통한 투자확대와 고용창출을 표면적인 이유로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경복궁 옆 옛 미대사관 부지(송현동)에 호텔을 짓고자 하는 재벌기업의 탐욕이 있다. 대한항공은 오랫동안 각종회의에서 적극적으로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하고, 정부는 기업환경개선, 규제완화 등의 미사여구를 동원하며, 발 벗고 나서서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항공이 소유한 해당부지 바로 옆에는 3개의 학교가 있다. 학생들의 학습환경 보호가 매우 중요한 곳이다.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내에 호텔부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학교보건법에 의해 원칙적으로 호텔건립이 금지되어 있다. 학교환경 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될 수도 있지만, 해당부지의 호텔은 학교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서 불가하다고 처분이 내려진 것이다. 법원의 최종 판결로도 호텔건립이 불가하다고 판단

되었다. 그럼에도 다양한 로비를 통해서 관광진흥법을 개정하여 학교 주변에 호텔을 건립하려고 하는 재벌기업은 당장 호텔 건립 추진을 철회해야 한다. 학생들의 쾌적하고 건전한 학습환경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그리 많지 않다.

호텔건립을 통한 고용창출효과가 미미하다는 점도 확인했지만, 서울의 호텔이 부족하다는 정부의 주장 역시 충분한 근거가 없음은 호텔이용현황에 대한 경실련 조사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정 재벌을 위한 것이 아닌 양, 투자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주장하는 정부는 그에 대한 실체를 밝히고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을 멈춰야 한다.

또한 대상지는 경복궁과 인접하고 북촌한옥마을의 입구에 있다. 서울의 역사가, 대한민국의 역사가 수백 년 지켜이 쌓인 땅이다. 설령 부지 옆에 학교가 없었더라도, 학교환경과 학습권의 문제를 떠나서도 특정기업에 특혜를 주는 편법적 법률개정시도로 파헤쳐져야 할 곳이 아니다. 답은 명확하다. 역사적인 환경을 보존하고 대중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문화융성을 중요 국정기조로 삼고 있다. 역사와 문화를 보듬은 양질의 콘텐츠를 통한 내실 있는 관광활성화가 필요한 것이지, 학교주변에 호텔건립을 허용하여, 호텔의 양적 확대에만 치중하는 것은 해답이 아니다. 꼭 필요한 착한 규제는 꼭 지켜야 한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 온 국민이 뼈저리게 깨닫고 있다. 정부는 학교주변 관광호텔 입지허용이 잘못된 규제완화를 즉각 인정하고, 철회해야 할 것이다. 

학교주변

2014년 7. 8월호

병원 경영 적자인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계상 등 병원 경영 왜곡 실태

남은경 사회정책팀 팀장
nari@ccej.or.kr

최근 병원 경영이 어렵다며 수익 증대를 위한 수가인상과 의료영리화정책 추진 등 의료계의 요구가 거세다. 지난해 정부도 의료계의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에서 병원의 경영난 해소차원에서 부대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비영리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를 허용하는 등 의료영리화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올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올해 수가계약도 인상 근거가 없다는 정부의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의협, 병협이 수가가 대폭 인상됐다. 의료계의 요구가 모두 수용되고 있으나 국민 입장에서는 달가울 수만은 없다. 수가인상은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지고, 부대사업 확대는 환자의 의료비 부담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의료 정책은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하며, 정책 목표가 타당한지 객관적인 검증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의료계의 주장대로 병원은 과연 적자이며, 현행 수가는 저수가인가?

병원적자와 저수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현재까지 제시되지 못했다. 의료기관의 경영 적자와 저수가 주장은 어제 오늘의 얘기

가 아니다. 매년 수가협상을 통해 수가 인상률을 결정하지만 병원 경영 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확인 없이 의료계가 제시하는 일방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수가계약이 이루어진다. 주먹구구식 수가협상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그만큼 병원 경영상태는 투명하지 못하다.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가 대부분 의료기관에 급여로 지급되는 만큼 의료기관의 경영자료는 외부 감사와 함께 공개 의무화가 필요하다. 경실련에서 지난 6월에 발표한 「대형병원 경영이익 축소 실태 조사」를 통해 병원회계의 불투명성과 함께 경영 왜곡 실태를 살펴본다.

1. 조사 목적과 방법

병원이 경영적자를 이유로 건강보험 수가인상과 수익확대를 위한 부대사업 확대 등 병원 수익 창출을 위한 정책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는 병원 운영상태의 객관적 검토 없이 이를 수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국민의 건강보험료 및 의료비 부담이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 건강보험공단, 병협 수가 인상

- 2014년(1.9% ↑, 추가 재정 소요액 2,970억원),

- 2015년(1.7% ↑, 추가 재정 소요액 2,819억원)

○ 복지부, 병원 부대사업 확대 및 영리자법인 허용 추진(시행규칙 입법예고 및 가이드라인 발표, 2014. 6. 10)

의료법(62조)에서는 병원 경영의 관리감독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은 재무제표를 작성해 매년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의료기관별 자료는 공개되지 않으며, 회계에 대한 외부감사 및 공시에 대한 의무규정이 법인 설립 주체별로 상이하여 제출한 자료의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상당수 종합병원은 외부회계감사 및 공시대상이 아님)

감사원은 2010년 국립병원 감사를 통해 병원이 비용으로 책정할 수 없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등을 비용으로 계상하여 병원의 당기 순이익을 축소하여 경영상태를 왜곡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복지부에 회계기준 개선 등 관련 제도 정비를 조치했다. 이에 관해 복지부는 지난해 9월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으나, 현재까지 개정 고시(안)이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회계자료가 공시되는 대형병원(상급종합)을 대상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등 경영성과를 왜곡하는 비용 과다 계상 실태조사를 통해 수가협상과 의료정책의 근거가 되는 병원 경영회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무분별한 수

가인상과 영리자법인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조사대상은 상급종합병원(43개)이며, 조사 방법은 국세청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시스템(<http://npointo.hometax.go.kr>)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http://www.alio.go.kr>),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된 상급종합병원의 2012년 당기 재무제표(손익계산서) 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과 고유목적사업비 계상 현황을 조사했다.

2. 의료기관 회계 기준(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비용 계상)의 문제점

감사원의 국립대학병원 운영실태 감사결과¹⁾에 따르면 병원 경영관리·운영에서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 회계기준」이 불합리하여 당기비용이 과다 계상됨으로써 병원협회가 건강보험수가 인상 주장의 근거로 삼는 등 건강보험 재정 건실화 저해 요소가 발생하고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 감사원 주요 감사내용 〉

- 복지부 「의료기관 회계기준규칙」에서는 「기업회계기준」상 당기비용으로 볼 수 없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장래 의료장비구입 등을 위해 적립)등을 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일부 병원들이 위 준비금을 비용으로 계상, 당기순이

1) (2010. 10. 7) 감사원 「국립대학병원 운영실태」보도자료 발췌

이익 같은 금액만큼 적은 것으로 왜곡되는 실정임.
 → 기업회계기준에 준비금은 실제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당기이익 왜곡을 이유로 비용으로 불인정
 → '08년 295개 종합병원(100병상 이상) 중 112개 병원에서 위 준비금 등을 비용으로 처리한 결과 재무제표에 당기순이익이 5,633억 원만큼 적게 표시되었고, '06~'08년까지 매년 평균 5,494억 원만큼 당기이익이 과소 산정됨.

- 대한병원협회는 위 왜곡된 재무제표를 근거삼아 매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수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병원의 실제 경영성적을 알지 못하는 공단은 수가 인상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실정.

복지부²⁾는 2013년 9. 18일 의료기관의 경영성과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국고보조금 등의 회계처리 기준 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그간 회계기준의 경영성과 왜곡에 대한 감사원 지적('13.4월) 및 지방의료원의 국고보조금 처리에 대한 국정조사 시정요구('13.7월)가 있었으며, 또한, 모호한 회계 처리기준으로 의료기관 간 수익·비용에 대한 차이가 발생하는 등 현행 회계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사항에 대해 개정안을 마련했는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고유목적사업비**를 비용으로 처리하여 순이익이 감소되는 왜곡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비용으로 설정할 수 없도록 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건물, 토지,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 취득에 지출하기 위해 적립하는 금액으로 법인세법 상 세제혜택 가능
 **고유목적사업비 :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법인으로의 전출금]

3. 대형병원 경영 이익 축소 실태

43개 병원 중 35개 병원에서 2012년 당기이익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등으로 비용이 과다 계상되어 이익이 축소된 총액은 7,054억 원으로 나타났다. 병원에서 작성한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2012년 35개 병원 당기순이익 총액은 △116,022,195,288원으로 적자로 나타나지만, 과다 계상된 금액을 조정하면 579,392,655,634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했다.

병원별로는 아산병원(지역포함)이 1천2백억 원, 연세대(신촌강남원주)병원이 2천5백7십억 원, 서울대(분당포함)병원이 5백2십억 원, 카톨릭대(서울여의도대구)병원이 6백1십억 원, 순천향대병원 3백1십억 원, 부산대 2백2십억 원, 영남대 2백억 원을 과다 비용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4. 결론

- 병원 경영회계 투명성 강화하여 객관적 자료가 정책결정에 반영되어야

2010년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하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당기

<표1> 의료기관별 경영 이익 축소 현황

(단위 : 억 원)

병원명	고유목적사업비(A)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B)	비용과다계상총액(C=A+B)	고유목적사업환입액(D)	당기순이익(E)	당기순이익조정(F=E+C-D)
연세대병원(강남원주포함)	0	2,577	2,577	0	-66	2,510
아산병원	0	1,205	1,205	0	14	1,219
가톨릭대 병원(서울여의도대구)	611	0	611	0	-258	353
서울대병원(분당포함)	0	520	520	100	-287	133
순천향대 병원(서울 부천 천안)	0	313	313	0	-77	237
부산대병원	0	220	220	0	-122	98
영남대병원	0	206	206	0	-21	185
동아대병원	0	184	184	0	0	184
경희대병원(강동포함)	124	47	171	0	-45	126
계명대병원	0	167	167	0	0	167
한림대병원	0	166	166	0	-28	138
삼성서울병원	0	100	100	0	-428	-328
합계	735	5,706	6,441	100	-1,319	5,022

*서울대병원은 고유목적사업환입액을 수익으로 계상하여 당기순이익에서 제외함.

순이익이 고유목적사업비준비금전입액 등 비용과다 계상을 통해 연평균 5,494억 원 과소 계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에서 조사한 상급종합병원과 합산하면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비용과다 계상 총액은 최소 연간 1조 2천억 원 이상 된다. 즉 병원의 경영이익은 1조원 이상 축소하고 매년 건강보험 수가는 3천억 원 가량 쪼개간 셈이다.

건강보험료는 국민 복지차원에서 마련되는 의료재원으로 그 부담은 국민의 몫이다. 따라서 정확한 기준 및 근거에 의해 산정되어야 한다. 보험수가 산정 시 의료기관의 경영성과는 매우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의료기관의 정확하고 투명한 회계정보 생성 및 제공은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 병원 경영 악화를 완화하기 위해 영리자법인의 부대사업 허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병원 회계자료는 감사원 감사와 경실련 조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비용과다 계상 등 외부감사와 공시 의무 부재로 인한 자료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 부실한 경영자료를 근거로 한 무분별한 부대사업 허용 정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병원 경영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부터 선행되어야 한다. 경

2) 2013. 9.24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발취



한미일 삼각 안보체제 너무나 위험하다

김용수
동국대 북한학과 박사과정
경실련통일협회 회원



▲ 지난 3월 한, 미, 일 정상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3국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은 2차 대전 직후 전 세계 GDP의 50%를 차지하고 군사비 지출 순위 10위까지의 국가들이 지출하는 군사비를 합친 액수보다 더 많은 군사비를 지출할 정도로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해왔다. 그러나 전 세계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힘만 믿고 막대한 재정적자를 감수하던 미국이 점차 경제적 쇠퇴의 길에 접어들면서 미국은 더 이상 아시아의 안보까지 장담할 여력이 없어졌다.

이로 인해 미국은 최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인정, 한미일 안보동맹 추진에서 보듯 일본에게 아시아 안보를 일정부분 위임하려고 하고 있다. 더구나 미국은 G2 국가로서 점차 패권화 되어가는 중국을 견제할 필요도 있다.

반면 일본은 전후 오로지 방어만 한다는 전수 방위 원칙을 저버리고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진 국가들 중의 어떤 한 나라가 제3국으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다른 나라가 이를 스스로에 대한 무력공격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반격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겠다고 주장하고 나서고 있다.



▲ 일본 아베 총리는 지난 7월 1일 각료회의를 열어 헌법 재해석을 통해 기존 전수방위의 방침을 깨고 사실상 전쟁 가능한 국가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미국과 일본 양 국가의 이해가 일치하면서 미국은 일본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이번에 방일한 오바마가 “센카쿠열도(다오위다오:조어도)의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 고 밝히거나, “집단자위권 행사에 따르는 제약을 재검토하는 것을 포함해 방위력을 강화하고 미군과의 협력을 심화하려는 아베 총리의 노력에 찬사를 보낸다.” 는 발언 등으로 볼 때 미국이 일본측에서 있음을 공개적으로 밝힌 셈이다.

문제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이 한반도에서 행사될 위험성이 가장 크다는 점이다. 한반도 유사시 주한미군에 대한 공격을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과 동일시하여 병참 지원을 넘어 자위대의 한반도 파병도 가능하게 된다. 정부는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은 한국정부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전시에 그러한 절차는 유명무실하기 쉽고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이 갖고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절차는 무시되기 쉽다. 극단적인 경우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진 미국을 대신해 일본이 이를 행사할 경우 한국군이 자위대의 통제 하에 들어가는 끔찍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미동맹의 경우 북한만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중국에 주장할 수도 있지만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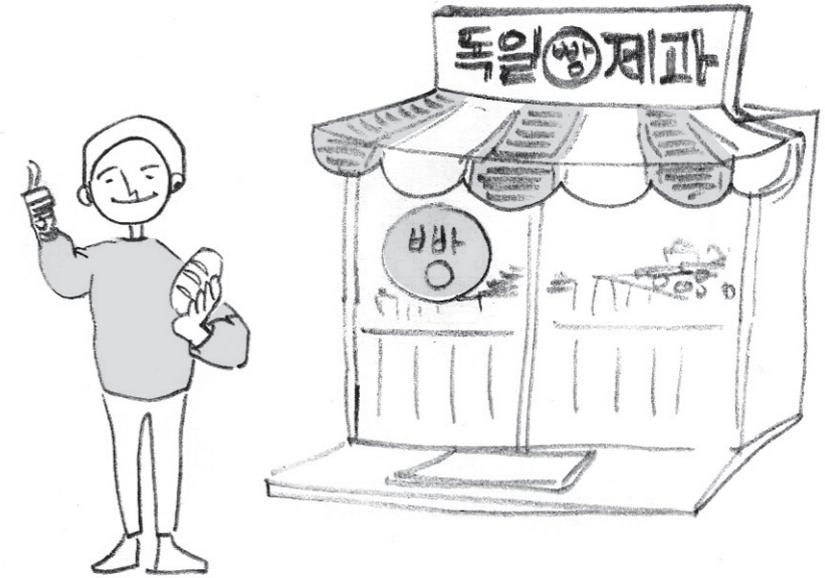
명박 정부 때 체결하려고 했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같은 한일동맹은 아니어도 이에 준하는 한일간 협력이 강화될 경우 한미일 삼각안보동맹은 완성되고 이는 명백히 대중국 봉쇄의 성격을 띠게 될 것이다. 이는 미사일방어(MD) 계획에 참여하는 것 만큼이나 위협하다.

미국, 일본과의 교역액을 합친 것보다 중국과의 교역액이 많은 현실에서 우리는 중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일본과의 군사협력 강화는 또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청일전쟁과 같은 중일 갈등이 한반도에서 이루어지지 말란 법도 없다. 중국을 봉쇄하고 일본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입장에서 오바마는 한국에게도 일본과의 협력을 압박할텐데 보수 정권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이면서 결과는 뻔해 보인다. 공개적으로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한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비공개적으로 논의는 될 것이며 대외적으로는 북핵 해결을 위해 한미일이 공조한다는 형식을 띠 것이다.

통일된 한반도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사이에서 운신의 폭이 커질 수 있는데 비해 남북으로 분단된 현재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커서 통일이 어려워지고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사이에서 균형을 지키기 어려워지며 남북이 각각의 세력에 포섭되는 등 운신의 폭이 작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중국도 군사력이 커지면 패권을 추구할 것이 뻔한데 과거 조선시대와 같이 중국에 예속되지 않고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한미동맹은 유지될 필요가 있으나 전시작전통제권은 환수되어야 하며 다만 한미동맹에 올인하거나 일본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정리**

백태수님의 '빵집'



여전히 소비자가 맛있는 독일빵집이 없어서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것 없었다. 지금 나는 주변에 파리바게트가 없다고 불편하다고 말한다. 전국 어느곳에서나 같은 빵을 파는 프랜차이즈 제과점. 우리는 어느곳에서나 같은 공장에서 만들어낸 공산품을 파는 슈퍼마켓이 없어서 불편하듯, 이미 '공산품'이 되어버린 빵을 사먹는 시대에 살고있다. 빵이 아닌 공산품.

“이제는 문학청년시절의 꿈을 찾아 시를 쓰고 싶다.”

라윤흠 회원 인터뷰

최예지 회원홍보팀 간사
cyj@ccej.or.kr

회원인터뷰 대상자 섭외는 매번 수십번씩 거절 당하기 일수다. 거절의 대부분은 “인터뷰 할 만큼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답변이다. 우리가 인터뷰 하고 싶은 사람은 늘 곁에 있는 평범한 사람이다. 이번엔 평범한 50대 남성 회원을 인터뷰 했다. 50대 남성인 것 이외에는 아무 정보가 없는 회원이다. 집에 계신 아버지를 생각하며 질문했다.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편하게 취미나 관심사를 등을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A. 좋은 아들. 좋은 아빠, 좋은 남편으로 살고 싶으나 늘 실패하고 마는 평범무쌍한 도시민, 전형적인 50대 직장인, 잘 안되지만 책을 읽으려 하고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놓지 않으려 노력하는 중...

Q. 회원님의 자녀분께 어떤 아버지이신가요?

A. 친구 같은 아버지가 되자고 결심도 하고 약속도 했지만, 생활 속 에서 제대로 실천되지 않는다. 가끔 대화를 하다가 보면 결국 ‘꼰대’가 되고 마는 그렇고 그런 아버지가 아닐까? 하고 싶은 걸 하라, 행복하게 사는 길을 선택하라 말해놓고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가 가진 잣대로 아들에게 강요하는 모습을 종종 발견한다.

Q. 아버지로서, 인생 선배로서 지금의 청년들에게 한마디 조언이나 응원 부탁드립니다.

A. 어떤 이야기를 해도 너무 뻔해지지 않을까? 결국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 무엇을 하든지 치열하게 부딪치라 말하고 싶다.

Q. 한국 사회에서 50대의 아버지로 살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 어디에서 위안을 받으시나요?

A. 마음이 통하는 친구들과 운동을 하거나 술 한잔 나누는 중에 위안을 받는다.

Q. 요새 하는 고민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어떤 고민을 하시는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A. 건강... 무릎도 시원찮고 몸이 전 같지 않음을 체감하니까.

Q. 베이비부머 세대 절반이 은퇴준비가 안되고 있다는데 회원님은 은퇴 후 계획이 있으신가요?

A. 질문 내용의 ‘절반’에 완벽하게 해당되는 사람 아닐까. ‘절벽’이 두렵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없다.

Q. 은퇴 후 걱정하는 점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A. 특별한 걱정은 없다. 남들처럼 자식걱정, 건강걱정을 가끔 하면서 살아간다.

Q. 앞으로 꼭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A. 생활에 매몰되고 게을러져 잃어버린 꿈을 되찾는 일, 문학청년시절의 꿈을 찾아 시를 쓰고 싶다.

Q. 인생 중 어떤 일이 가장 아쉽고 후회가 남으신가요?

A. 공부에도 때가 있다는 점을 깨닫지 못한 일, 대학원 진학이나 편입을 생각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던 점.

Q. 본인이 생각했을 때 살아오면서 이것만큼은 잘 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신가요?

A. 그다지 생각나지 않는다. 크게 잘못된 일도, 크게 잘한 일도 없는 것 같다.

Q. 우리 사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A. 모든 기준이 ‘돈’이라는 잣대로 재단되는 현실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최소한의 교양 그리고 배려가 있는 세상이 되기를 희망한다.

Q. 회원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세상은 어떤 세상 인가요?

A. [경실련]이 없는 세상이거나, 있더라도 할 일이 없어서 고민하는 세상...(^^)

Q.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시대의 많은 아버지들을 대표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대표가 아니므로 사양하겠습니다.

50대를 지천명[知天命]이라 한다. 이제는 미래를 위해 무작정 덤벼들기보다는 차분히 준비해 나가고 현재를 즐기는 모습이 정말 경험을 통해 지천명을 알아가고 있는 것 같다. **경**

회원인터뷰는 누구에게나 열려있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인터뷰 하고 싶으시면 연락주세요!
02-744-0400 member@ccej.or.kr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제일 좋은 시작”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김보라미 변호사 인터뷰

최예지 회원홍보팀 간사
cyj@ccej.or.kr



Q. KT 개인정보 유출 공익소송을 맡고 계십니다. 이번 소송은 어떤 의미를 갖나요?

A. 이번 소송은 두 가지 이유로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KT가 2년 전에도 똑같은 사건으로 적발되었는데 방통위가 그 당시 KT에 면죄부를 준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냥 넘어간다면 이전의 방식을 KT가 답습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경실련을 통

해 명확하게 짚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KT와 같은 기간 통신사업자들의 경우에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본인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다른 기업들과 달리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할 수 있는 특혜조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사건에서 드러나듯 보호조치가 미흡하고 사고 후 대책이나 조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명백한 문제점들을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소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Q. KT 개인정보 유출 공익소송으로 어떤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나요?

A. KT가 변화할 수 있겠지만 우선 KT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많은 시민들이 소송에 참여했으면 좋겠고, 경실련 사무국에는 미안하지만 3년의 시효기간 동안은 계속해서 소송인단을 모집했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모두 참여하세요! 꼭 참여하세요!

Q. 다른 로펌들도 KT 관련된 피해자 집단 소송을 진행 중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다른 로펌에서도 했으면 좋겠고 개인소송으로라도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피해자가 소송에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에 개인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소장도 공개했고 이후 소송과 관련된 자료는 전부 공개할 것입니다. 그래야 기업들도 소비자들이 무서워서 이런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을 것입니다.

Q. 요즘 KT 이전에도 카드사 등등 개인정보 유출이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A. 스노든이 폭로한 NSA 건을 보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정보가 집중되어가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으로 앞으로 점점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과거에 비해 피해 범위, 규모도 클 것이고 굉장한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EU의 경우에 이미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손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는 EU나 미국 같은 나라와 달리 주민등록번호와 강제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현행 제도가 있어서 더 심각합니다.

Q. 개인정보 보안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해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A. 모든 정보들이 어떤 경로로든 모여져 집적되고, 정부와 대기업이 서로 협력하는 시대에 정부, 대기업 그 누구도 시민들은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수집한 정보로 시민을 어느 범위까지 감시하는지 알 수 없고 기업은 또 어디까지 마케팅을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보가 내 손을 떠나면 어디까지 퍼져 나갈지 알 수 없습니다. 현행법상 기업들은 정부에 협력할 의무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기업 스스로 소비자정보를 정부에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절차가 명쾌하거나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정부와 대기업간에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감시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정부가 해야 할 일에 앞서서, 시민이 정부가 하는 역할과 업무과정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투명한 절차와 토대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인정보 보안과 관련하여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할 일입니다.

두 번째로, 정부는 주먹구구식 접근 보다는 인권적 측면에서 절차와 방법 등을 설계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함부로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원칙들이 실질적으로 가능해지는 체계를 만드는 것 같은 것들이지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시민의 연대는 정부의 역할이 시민 친화적으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지요.

Q. 인터넷 망중립성 및 개인정보 관련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 2년 전에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 있었는데요. 방통위에서 개최하는 망중립성 포럼, 망중립성 정책자문 위원회 등을 구성할 때 경실련 등이 참여를 하려 했으나 담당 공무원들이 알아서 잘 할테니 걱정 말라면서 포럼 참가를 제한하고 포럼 회의도 공개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럼에 참여한 사람 중 아무도 그러한 폐쇄적 포럼운영에 문제제기조차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방통위는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사회적 합의안이라고 광고했었는데, 실제 공청회 토론 일주일 전에도 공개되지 않았었습니다. 우리가 그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안을 어렵게 구해서 온라인에 모두 올렸더니 방통위에서 내려달라고 요청이 왔었습니다. 이외에도 망중립성 정책수립과정은 시민들에게는 이해 못 할 행동들이 많았습니다. 어렵게 구한 정보들로 2년 여간 방통위에 문제제기하고 시위하고 해서 그나마 좀 보기좋은 안이 나왔었습니다. 그 때 저희가 망중립성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도 했으나 이 역시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주된 이유 중 하나가 통신사에서 제공한 것이라 사업자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거절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수, 경쟁사업자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포럼에 제출한 자료가 어떻게 사업자 영업비밀이 되는지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갑니다. 아무튼 당시 방통위는 2014년 6월까지 무선인터넷전화를 전면적으로 풀겠다고 약속까지 해서 폐쇄적 과정에 대하여는 불만이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망중립성 논쟁이

잘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했었지요. 그런데 최근에 미래부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니 정말 열받게 하더군요. 미래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제목에는 mVoIP를 전면 허용한다고 나와 있어 허용된 줄 알았는데 자세히 세부내용들을 살펴보니 전체 요금제에는 허용하지만 요금제별로 사용용량제한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전면 허용 입니까? 미친 것 아닙니까?

Q.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이 취할 수 있는 혹은 취해야 하는 행동은 무엇이 있을까요?

A.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제일 좋은 시작인 것 같습니다. 남들이 이상하지 않다고 해도 이상하다고 생각한다면 꼭 문제제기를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Q. 문제제기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A. 잘못된 것 같다면 주변에 이야기해보는 것이 시작인 것 같습니다. 이거 이상하지 않나? 서로 이야기하다보면 시작이 반이라고 해결방법에 대한 힌트를 발견할 수도 있고 문제에 대한 연대의 시작이 될 수도 있겠지요.

Q. KT 공익소송 이전부터 공익과 관련된 많은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익에 관심이 많으셨나요?

A. 우리 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공익을 실현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공익을 실현하는 것은 내 주변 사람들, 그리고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변호사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소송이라 생각했어요. 변호사 2년차 때 데이터 요금이 많이 나와서 자살한 중2 학생 사건을 진행하면서 소송이 사회에 주는 좋은 영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초년 변호사였을 때부터 적어도 일 년에 한 두건은 꼭 공익소송을 하자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사회를 바꾸는 것은 너와 나를 위한 것이니깐요.

Q. 가장 의미 있었던 공익 소송 재판을 꼽자면 무엇이 있나요?

A. 데이터 요금이 많이 나와 자살한 중2 학생 소송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그 소송을 하면서 통신사에 대한 신뢰가 많이 무너졌던 것 같습니다. 거대 기업들의 문제들, 정부기관과의 담합의 문제들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해준 사건이었죠. 통신사들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하지 않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소비자들 대기업들이 실험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었죠. 정부기관은 거대통신사에 대한 필요적절할 감시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도 큰 문제예요.

Q. 변호사 되기 전부터 사회활동에 관심이 있으셨나요?

A. 변호사 하기 전에는 20대 대학생이어서 사회활동을 잘 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20대에는 좀 많이 수줍음을 많이 타기도 했었죠.

Q. 요즘 '잊혀질 권리' 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스노든의 폭로사건을 아시나요? 국가가 기

업과 협력하여 전 세계 시민을 빅데이터 기술로 시민들이 생성한 대량정보들을 반인권적인 방법으로 수집분석해서 큰 문제가 되었죠. 이것이 지금 갖는 의미는 “시민이 시민을 지배하는 민주주의에서 시민이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정보기관을 감시할 것”이라는 신뢰가 깨졌다라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절차를 통하여 권한을 위임한 자들이 시민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해졌다는 것이죠. 이제 국가기관에 대하여는 누구나 문제제기하고 감시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야 민주주의의 문제가 고쳐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반면, 시민들에 대한 대량정보수집을 통한 반인권적인 감시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익명권을 보장해주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즉, 국가기관에게는 투명성을 요구하고 시민에게는 익명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잊혀질 권리가 남용될 확률도 있지만 이러한 일반 시민에게 익명권을 보장하는 시스템으로의 변화를 위해 발전적 논쟁의 시작과 계기를 만드는 것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시민들은 정부와, 대기업들에게 내가 원할 경우 익명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 하는 논의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합니다. 공공 영역은 투명해지고, 사적 영역은 익명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힘이 있는 사람에게 약자가 할 수 있는 권리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힘이 있는 국가, 대기업, 공인들이 잊혀질 권리를 주장하면 안됩니다. 핵심은 일반 시민들이 사적 영역의 보호를 위해서 주장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잊혀질 권리가 갖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6.4 지방선거 당선인과의 토크쇼

최윤정
청주경실련 사무처장



▲ 왼쪽부터 장선배 도의원, 최충진 시의원, 육미선 시의원, 김병우 교육감, 현진 공동대표, 최윤정 사무처장

- 일 시 : 2014년 6월 23일(월) 저녁 7시
- 장 소 : 행복카페 2층
- 사 회 : 현진 공동대표, 최윤정 사무처장
- 출 연 :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장선배 충북도의원, 최충진 청주시의원, 육미선 청주시의원
- 참 석 : 회원, 시민 등 40여 명

[편집자주] 당선인과의 토크쇼는 '틀에 박힌 선거평가 토론회 말고 뭔가 새로운 형식이 없을까?' 고민하다 생각해낸 프로그램입니다. 경실련 회원 중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분은 총 여덟 분.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어느 때보다 조용하게 치러졌지만, 후보들로서는 어려운 선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경실련 회원이 묻고, 당선인이 답하다"라는 부제가 붙은 토크쇼에 대해 참석자들은 "신선하다.. 1년 뒤에 또 하자.. 이게 소통이다.. 깜짝 선물에 빵 터졌다.."고 평해 주셨습니다. 그날의 분위기를 전합니다.

토크쇼를 시작하며..

최윤정 : 오늘 토론의 컨셉은 '힐링 캠프' 짝퐁 버전이다. 때론 유쾌하게, 때론 정곡을 찌르는 질문들을 던져보려고 한다. 얼떨결에 출연을 허락하고, 대체 어떤 토크쇼인지 감이 잡히지 않아 불안해 하고 계신 네 분 당선인에게 감사한다.

현진 : 이런 토론의 자리가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 난상토론이 많이 정착되어야 우리 사회가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토론이라는 것은 조금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과정이다. 보다 나은 생각은 토론을 통해서 도출될 수 있다. 이것이 진정한 진보가 아닌가. 요즘 정치의 화두가 지나치게 경제에 치중되어 있다. 좀 더 성숙한 정치가 되려면, 이 사회의 신뢰와 도덕의 수치가 높아져야 한다.

오늘 토론이 우리 지역의 모범적인 토론 문화 정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얼굴을 가리고 하는 토론에는 익숙하지만, 얼굴을 마주보며 하는 토론·대화에는 약한 것 같다. 비록 작게 시작하지만, 오늘의 토론이 충북 지역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큰 힘이 될 것이다.

질문들..

▶ 김병우 교육감

Q. 향간에는 잘 생긴 외모 덕에 당선되었다, 본인보다 선거운동을 잘하는 가족 덕을 봤다는 얘기가 들린다. 어떻게 생각하시나?

A. 거의 팩트에 가깝다.(웃음) 선거에 나온 이후 허우대가 멀쩡하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다. 아이

들보다 여성분들이 솔직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 사실, 가족들이 후보인 나보다 인기가 있었다. 우리 아이들의 공이 50%는 차지하지 않았나 싶다.

Q. 친구들 중에 교장이 많은데, 김병우가 교육감 되면 충북 교육이 망한다고까지 얘기하더라. 이것이 우리 교육의 현실이다.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하실 건가?

A. 그 문제가 내게 주어진 과제이다. 말씀하신 내용은 보수 진보의 문제라기보다는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라고 본다. 진정성을 보이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교육은 온고이 지신이라 했다. 교육은 옛것을 익히는 것과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모두 갖춰야 한다. 저는 처음부터 보수, 진보를 가르는 프레임을 깬다.

▶ 육미선 의원

Q. 선거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다. 30.6%로 1위를 차지했다. 선거운동기간 동안, 걱정을 많이 했다고 들었는데 괜한 염살 아니었나?

A. 사실 기호 배정 전에는 자신이 있었다. 무공천한다고 했을 때도 괜찮았다. 그런데 기호 '가'번에 쏠리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걱정을 안할 순 없었다. 길거리에서 아이들이 응원해 주는 모습을 보면서 희망을 보았다. 전과와 세무체납이 없는, 상대적으로 깨끗한 후보라는 점도 작용한 것 같다.

Q. 지역의 작은 도서관 활성화 운동을 하고 싶다는 포부를 들었다. 작은 도서관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있나?

A. 개인적으로 독서지도사를 한 적이 있다. 시의



▲ “아이들만 바라보고 가겠다” 하신 김병우 당선인께서는 요즘 유행하는 장난감 ‘또봇’을, 치열한 선거운동으로 체력보강이 필요한 육미선 의원께서는 ‘비타민’을, “앞으로도 자원봉사를 더 열심히 하겠다” 하신 최충진 의원께서는 ‘작업용 장갑과 타월’, “안전한 지역을 만들겠다”고 공약하신 장선배 의원께서는 ‘안전모’를 선물로 드렸습니다.

원이 된 후 도서관에 관심 있는 몇몇 의원들과 전국 최초로 도서관 연구 모임을 만들기도 했다. 내가 살고 있는 산남동엔 8개 아파트 중에 7곳에 작은 도서관이 있다. 처음엔 도서관으로 무얼 할 수 있겠냐는 얘기도 많이 들었다.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꾸준히 함께한 파장효과는 컸다. 대신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진 않는다. 이것이 생활정치, 풀뿌리 민주정치의 현장인 것 같다.

▶ 최충진 의원

Q. “자원봉사하는 시의원”이라는 컨셉으로 선거운동을 했다. 비교적 재력가로 알고 있는데, 자원봉사를 하게 된 계기가 있는지?

A. 진로그룹에서 24년 근무하면서 음성꽃동네로

봉사활동을 자주 간 것이 지금까지 이어온 것 같다. 뒤돌아 보면, 젊었을 때 했던 자원봉사가 지금의 나를 만들지 않았나 싶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 정말 열심히 했다. 집에 새벽 2시 전에 들어가는 날이 손에 꼽을 정도였다. 앞으로 더욱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Q. 여야 의원들이 열심히 활동하지만 유권자들은 지역구 의원이 누군지도 잘 모른다. 그래서인지 일부 의원은 노이즈 마케팅으로라도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 같다. 앞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어떻게 알릴 것인가?

A. 유권자들은 실질적으로 주부들이지, 남자들은 영양가가 없다.(웃음) 요즘 주부들은 봉사활동을 많이 한다. 처음엔 유권자를 만나지 않고 왜 설

거지를 하고 있느냐는 지적도 받았다. 하지만 유권자들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지, 앞에 나와 인사했다는 걸로 기억해 주지 않더라. 지금 유권자들은 다 비교하고 투표한다. 전과, 세금 등등. 열심히 유권자 속으로 들어가 활동하겠다.

▶ 장선배 의원

Q. 선거공보물 표지에 후보자 얼굴 대신 세월호와 안전 문제에 대한 편지글을 실었다. 기자 출신이란 걸 강조한 전략인가, 비주일이 약해서인가? 아니면 둘 다인가?

A. 둘 다겠지요.(웃음) 유권자들에게 여러 후보의 홍보물이 같이 가니까, 안면 사진을 넣으면 눈에 띄지 않을 것 같았다. 가슴 아프지만 세월호 참사와 안전 공약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다.

고심 끝에 모험을 했는데, 결과가 좋았는지는 잘 모르겠다.

Q. 상당구에선 유일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다. 여야간 구도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돌파할 것이며, 어떻게 전망하는지?

A. 지사와 의회의 다수당이 상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어떻게 전개될 진 잘 모르겠다. 기회요인도 있고 위기요인도 있을 것이다. 낙관적으로 본다. 일반행정 부문은 여야가 걸은 싸우더라도 뒤에선 서로 합의점을 찾고 협력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 오히려 교육부문이 우려된다. **경**



▲ 토크쇼의 마무리는 사진 촬영~ 함께 하신 분들의 환한 미소, 보이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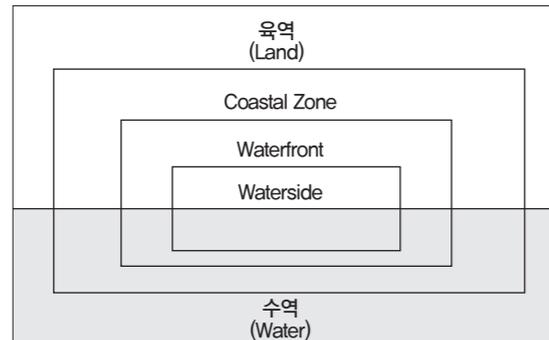


인천판 4대강으로 전략한 송도워터프론트

최혜자
인천경실련 사무국장

외국의 워터프론트 사례

워터프론트[Waterfront]란 명확히 정의되어지는 용어는 아니지만 우리말로 수변공간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더 나아가 수변공간을 가지는 육지부의 개발된 공간을 나타낸다. 일본건축학회에서는 ‘해안선에 접한 육역주변 및 그것에 특히 근접한 수역을 병행한 공간’이라고 하고 있다.



▲ 수변공간의 유형

외국의 워터프론트 개발 계획은 산업유형의 변화로 항만 기능을 상실한 항만 주변도시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단순히 항만재개발로 인한 친수공간의 창출이 아닌 도시재생의 개념과 유사한 의미를 갖게 되면서 도시재생의 한 방법으로 수변공간과의 연계 개발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1960년대 미국과 캐나다에서 항만 재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보스턴,

뉴욕, 볼티모어, 마이애미, 토론토 등으로 개발되었고, 1980년대 미국의 영향을 받아 유럽 및 일본에서도 워터프론트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외국의 워터프론트 사례를 보면 공공기관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민간의 개발을 유도 관리하고 있으며 워터프론트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과 그에 따른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 공공기구 설립을 통해 계획 초기부터 개발이후의 지속적인 책임관리까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특히, 공공에게 제공되는 혜택과 이익의 균형을 맞추려 노력했다.

송도워터프론트

인천시는 지난 2010년 총사업비 300억을 들여 2012년까지 심곡천~공촌천~경인아라뱃길~굴포천간 80km 물길과 용현 갯골수로~송도북측지~남동유수지~송기천~소래~장수천간 40km에 이르는 물길을 잇는 어진내(仁川) 300리 물길투어 조성 프로젝트를 발표하였고, 2012년에는 2017년까지 총사업비 2732억 원을 들여 송도 북측수로와 6□8공구 호수의 수질개선과 수(水)순환 연계 체계를 만들고 사업지 내 수로 주변 환경 정비사업을 벌이겠다는 송도 워터프론트 계

〈표 1〉 외국의 워터프론트 사례

구분	보스턴	뉴욕	시드니	요코하마	싱가폴	
프로젝트	사업	그린웨이 재개발프로젝트	배터리파크시티 프로젝트	달링하버 재개발	미나토미라이21	마리나베이 프로젝트
	개요	Charles River 그린웨이 Rose Kennedy 그린웨이	맨하탄 남단 허드슨강변의 12만2천평의 매립지에 주거와 사무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복합개발	항만기능 상실한 18만평 부지에 해양, 레저, 위락 중심지로 복합개발	일본의 개발도시로 도시의 자립성 강화 및 항만기능의 질적 전환과 수도권의 업무기능 분담	마리나베이 남동쪽을 매립해 조성한 약3만2천평 부지에 국제 업무 및 주거지역 복합개발
	주요특징	천혜의 풍부한 자연환경과 선형구조의 공원 녹지 체계가 조성되어 있음	전체 개발면적의 30% 넓이의 강변 산책로, 공원, 광장조성	- 모든 수변공간에 일반인을 위한 수변산책로 우선배치 - 수변과 가장 멀리 떨어진 공간에 숙박시설 유치하여 숙박업체가 수변 및 조망권을 독차지하는것을 방지 - 워터프론트 주변 토지의 무질서한 사유화 지양	- 요코하마의 역사성을 살리는 계획 - 전체 개발면적의 24.7% 공원녹지로 조성 - 수변을 따라 산책로 조성 - 보행자네트워크 조성, 보행자용 움직임은 보도설치	- 전체 개발면적의 37% (14만평) 시민을 위한 공원으로 조성 - 공원 등 공공 공간의 조성을 1단계에서 실행 - 수변산책로 1.5km 조성 - 전체 3.35km의 보행자도로 완성 - 환경과 경제가 공존하는 개발추구
개발주체	기관명	BRA (Boston Redevelopment Authority : 보스턴 도시재개발 공사)	BPCA (Battery Park City Authority : 배터리파크시티공사)	SFHA (Sydney Foreshore Harbour Authority : 시드니항만청)	요코하마시 항만국	URA (Urban Redevelopment Authority : 도시재개발청)
	성격	- 보스턴 시의회 및 메사추세츠 입법부에 의해 설치 - 보스턴 주책위원회에 의해 개발권한 맡음 - 도시계획위원회의 권한 BRA로 이전	- 주정부, 시정부, 지역상공회의소가 참여하는 공약을 위한 단체 - 1962년 조성단계부터 사업에 대한 종합관리를 통해 과도한 개발을 막고 상업, 주거, 공원이 균형잡힌 커뮤니티를 이룰 수 있도록 함 - 시민·기업·전문가 정부가 통합적 시각을 가지고 도시문제를 해결	시드니항만청법에 의해 설립된 독자적인 주정부 기관	국가적 프로젝트로 공공섹터, 민간섹터, 제3섹터(주요코하마 미나토미라이21 등)가 함께 사업추진	- 싱가포르 국가개발부 산하기관, 도시계획 및 설계전문가 1천명으로 구성된 전문 설계조직 - 통합적이고 협력적인 시스템으로 접근
	지향	- 메사추세츠 일반 법률에 앞서는 법령의 권한을 가진 - 보스턴 재개발 유도 - 지역 규제 완화요구, - 공공보조금 받는 프로젝트를 검토, - 기반시설, 도심지와 지역사회 경제개발에 필요한 마스터플랜 수립 - 설계지침과 개발지침 작성	- 마스터플랜 수립 - 디자인가이드라인 작성 - 개발자 선정 - 개발수익의 공공적 활용	- 친수개발의 핵심인 수변조망권에 대한 공공재로써의 가치를 높게 인식 - SFHA 소유 및 정부소유의 자산 관리 - 새로운 범위의 장소 개발 - SFHA 관할구역과 시드니의 마케팅 - 법령과 마스터플랜 - 재정관리	- 공공섹터 : 사업의 전체 계획 및 종합조정, 공공시설의 건설 - 민간섹터 : 업무시설, 상업시설, 문화시설 등의 건설 - 제3섹터 : 업무기능 유치, 시가지정비조정 추진, 회의시설 등의 건설 운영, 정보서비스, 공공시설의 관리 및 운영	- 개발계획 수립과 관리 - 컨셉 플랜과 마스터플랜 수립 - 상세한 개발지침 계획 수립 - 설계 가이드라인 제시 및 조언 -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나 민원사항, 인허가 등에 도움을 제공

획을 발표했었다.

그러나 어진내(仁川) 300리 물길투어 조성 프로젝트는 지난 민선 5기 선거연대 정책합의과제

였음에도 재정의 어려움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심각한 인천시 재정난을 이유로 기본 및 실시계획 비용도 마련하지 못한 채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었다.



▲ 송도위터프론트 수공간 계획

반면 송도위터프론트는 수면적 6.04km²에 송도 6·8공구호수~북측수로~11공구 호수~남측수로를 ‘口’자 모양으로 연결하여 물위에는 요트, 보트 등 배를 띄우고 수변에는 인공해변, 위터프론트 콤플렉스, 마린스포츠교육센터 등 각종 시설을 짓는 내용의 계획으로 변경되었다. 이를 위해 이미 매립을 통해 기초성된 6·8공구 호수는 530m폭으로 넓히고 호수 북쪽과 남쪽을 깊이 3m~5.5m 폭 60m로 파서 연결수로를 만들고, 아암도 맞은편에 인공섬을 설치하고 상업시설을 도입하며 북측수문엔 시설용량 4,950kw 짜리 조력발전설치를 설치하겠다고 한다.

이미 경제청은 수로 연결과 함께 4개의 수문을 설치하고 수로 신설 및 증심과 확폭과정에

서 발생하는 토사를 송도매립에 활용할 계획도 세워 놓고 있다. 사업비는 당초 2732억 원에서 9,777억 원¹⁾(공공기반시설 8,781억 원, 민간유치시설 996억 원)으로 무려 357%나 늘어났다. 앞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본 사업이 추진되면 총사업비는 더 늘어날 것이다.



▲ 송도위터프론트 조감도

송도위터프론트 추진을 위해 인천시와 경제청은 경제자유구역 내 도로·공원 부지를 축소하는 대신 주택용지·근린생활시설용지·일반상업시설용지를 늘리고 수로주변부지 이용계획 변경을 통한 대물변제방식 공사와 민간투자 방식을 도입하여 사업비용을 마련할 계획이다. 본질인 수질개선은 사라지고 부동산 개발만이 남았다. 4대강 사업 추진과정과 매우 흡사하다.

건설사가 대물변제를 결정하려면 토지수익률 향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하지만 현재 부동산 경기 침체 국면이 길어지면서 대물변제 리스크를 안고 참여할 건설사 확보가 가능할지도 의

문이다. 부동산 경기에 매우 민감한 매립용지 매각수입에 의존하는 경제청이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로 송도 11공구 매립 및 6·8공구 기반시설 조성사업도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1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사업비가 소요되는 거대한 개발사업을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매각이 불발될 경우 수천억 원의 비용은 고스란히 인천경제청의 부담으로 남는다.

인천시와 경제청 심각한 재정난 돈이 말랐다.

인천시의 1년 예산은 7조8천억 원에 불과하지만 빚은 12조8천억에 이른다. 올해만 4,800억의 부채(원리금)를 갚아야하고,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나면 경기장 관리비 및 운영비 등 추가재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게다가 내년부터는 5,000억 원의 지방채 상황이 도래하게 된다. 경제청의 사정이라고 다르지 않다. 지난 6월16일 희망인천 준비단 경제청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경제청은 현재 재정수입 감소로 인해 송도 11공구 매립 및 6·8공구 기반시설 조성이 지연되고 있으며, 기매각된 송도 6·8공구 기반시설 조성비 1,682억 원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재원을 마련할 방안이 없어 기채발행 등 여러 가지 방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새로운 인천시의 판단 필요해

인천은 바다와 150여 개의 섬들과 40여 개의 지방2급 하천과 국가하천인 경인아라뱃길, 인천

항, 용현갯골과 소래포구 등 물과 관계된 풍부한 자원을 갖고 있으나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노력은 부족하였다. 지역의 풍부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도시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인천에 있는 전체 위터프론트에 대한 마스터플랜이다. 계획초기부터 개발 이후 지속적인 책임관리까지 이루어지도록 종합계획이 필요하다. 외국 도시에서 잘되었다고 송도에도 같은 시설이 있을 필요는 없다. 가장 한국적이고 인천만이 지닐 수 있는 독특하고 차별성 있는 기능과 시설 개발이 필요하다. 송도 습지구역이란 천혜의 자연환경과 생태계와 조화 이것이 타 위터프론트 도시와 차별되는 송도만의 특징이다. 또한 위터프론트의 성공은 수질에 있다. 수질개선이란 본래의 목적을 회복할 때 송도위터프론트가 인천판 4대강 사업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다.

이제 민선 6기 유정복 시장이 취임했다. 취임사에서 제일 먼저 시에 대한 ‘종합경영진단’을 실시하겠다고 제시하였다. 인천시의 재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시정 상황에 대하여 실태진단을 한 후 새로운 인천시의 판단이 필요하다. **경**

1) 경제청은 2단계 사업비 일부인 기반시설 조성비 1,935억 원을 11공구 개발사업 시행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기에 위터프론트 조성사업비에서 제외하고 총사업비 7,842억 원으로 발표하였으나 필자는 이를 포함하여 총사업비로 계산함



빛고을 광주? '빚'고을 광주! 그 이면에 존재하는 민선 5기 화정지구 재건축 사업에서 드러난 광주시의 문제

김세현
광주경실련 부장



▲ 광주 U대회 선수촌 화정지구 재건축 현장

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총인시설 입찰비리, 켄코사태와 더불어 아들 채용 논란, 상무소각장 폐쇄 및 추가 비용 발생 논란, 화정주공 재건축 사업의 월권행위 및 연대보증문제, 세계수영선수권 대회 공문서 위조 등 사건사고가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치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특정정당의 '물표'와 '의리'에 기인한다. 역사에 만약이 존재하지 않지만 만약 광주시민

이 가지는 '의리'가 강운태 전 시장의 특정정당으로부터의 공천을 받았다면, 그 결과는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모순적이게도 이러한 결과를 야기한 정당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어차피 광주시민은 또 그 '놈'의 정당과 후보를 밀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2. 민선 5기 그 중심에 선 화정주공 재건축 사업

재건축 사업은 일반적으로 민간사업이다. 다시 말해서 재건축조합과 시공사가 사적거래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면 되는 문제이다. 그런데 공공기관이 이 문제에 관여하면 더 이상 사적계약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해당 조합이나 시공사에 엄청난 특혜를 주는 것임과 동시에 공공기관으

로서는 월권행위를 자행한 것과 같다. 이러한 상황은 실제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광주시에서는 이런 문제가 실제로 일어났다.

화정주공은 광주 내 재건축 조합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그렇기에 사업의 위험도 크고 사업추진을 위한 소요비용도 많이 든다. 엄연히 이 문제는 사적 계약의 문제지만 광주시는 화정주공 재건축 사업에 대해, 유니버시아드대회 선수촌 활용을 빌미로 특정건설사인 현대건설과 화정주공재건축 조합과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광주시의 개입은 몇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

첫째, 형평성의 문제와 월권 및 업무태만의 문제이다. 광주시는 유니버시아드대회에 따른 선수촌 활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지역 내 숙박업소나 지역 대학교 기숙사의 활용을 통해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부정적 문제를 낳지 않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재건축 단지에 공적개입을 함으로써 특정건설사의 분양률에 개입하였고 나아가 광주 내에 존재하는 다른 재건축조합을 배제한 특정 조합에 특혜를 부여하였다.

특히, 앞서 밝힌 선수촌 활용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지 않은 채, 특정한 재건축 조합과 특정 시공사와 위 문제를 해결하려 한 행위는 공공기관이 가지는 사적개입 금지에 위배되는 월권행위임과 동시에 특혜와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하는 중대한 실정이라 할 것이며, 업무 태만이다.

둘째, 미확정 분양보증 채무안에 대한 동의의 문제이다. 실제 미확정 분양보증은 전국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특혜이자, 의혹의 정점이다. 이 문제는 한번 꼼꼼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특정건설사와 특정조합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분양률이다. 다시 말해서 분양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재건축사업의 성패가 달린다는 말이다. 그런데 공신력을 가진 시가 분양에 대해 보증을 선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떨까? 아마무래도 소비자는 시가 보증한 화정주공재건축 아파트를 선택 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특정건설사인 현대건설과 해당 조합에 대한 특혜이자 형평성 위반이며, 광주시는 권리남용이자, 시장을 왜곡한 불법적 행위다.

이는 광주시가 자랑스럽게 홍보하는 화정주공 아파트의 100% 분양과 분양보증에 따른 손실 미발생의 문제가 아니라, 광주시라는 기관을 이용한 광주시장과 실무자들의 야합이며 시민을 기망하는 부도덕하고 불평등하며 비합리적인 행위인 것이다.

셋째, 부동산투기 조장과 임차인 보호 등의 문제이다. 몇 년 전 서울의 뉴타운 정책이 끼칠 문제들을 간과한 채 추진된 사업은 결국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침해하고 서울시의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여 부동산 투기와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주도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광주 내 재건축 사업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야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광주시민의 일원인 화정주공의 임차인에 대해 거주권을 침해하는데 일조했으며, 임차인들의 주거권 확보를 위한 대안조치 마련하

지 않았다. 또한 화정주공 재건축사업의 분양보증은 전매를 통한 분양가격 상승과 투기부동산의 과다 발생을 야기했고 광주전반의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켰다. 이러한 현상은 광주시가 공공기관으로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임차인으로 대변되는 서민들의 안전한 주거권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기본 역할에 전적으로 반대되는 정책이자, 행위이다.

넷째, 발생가능성이 높은 미확정 분양보증채무의 확정채무 전환이다. 광주시는 대대적으로 화정주공 재건축단지가 100%의 분양을 통해 시의 분양보증의무가 해소되었음을 홍보한다. 하지만 이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문제이다. 그 이유는 재건축조합이 가지는 특수성에 기인한다. 다시 말해서 재건축조합은 청산 절차를 진행하고 종료시점까지 가 봐야 채무의 존재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실제 위 사업의 분양보증의무 해소는 확인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나아가 만약 위 사업의 미확정 채무의 확정채무 전환이 현실시 될 경우, 광주시는 또 한 번의 채무를 떠안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야기한 화정주공 재건축사업의 더 큰 심각성은 광주시의 실정이 이 문제에 한정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3.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광주시민의 자세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광주시와 광주시민은 여전히 열등감과 피해의식으로 인해 특정정당에 대한 일방적 지지를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

만 민선 5기, 강운태 시장의 빈번한 실정과 전시 행정은 광주시의 재정자립도를 더욱 약화시켰고 '빛고을 광주'가 아닌 '빛고을 광주'로 전락시켰다. 더욱이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해당 정당은 아무런 통제와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은 광주시를 더욱 낙후시키고 민선시장의 일방적 행정추진을 야기하는 빌미를 제공하게끔 하는데 일조하였다.

민선6기는 이제 막 시작하였다. 하지만 시작되는 민선 6기 역시, 광주시민은 정책을 고려하고 중립적 시각을 통한 선택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예전에 그랬든 특정정당이 내세운 후보였기에 당선된 측면이 크다. 더욱이 광주시의 재정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민선 6기가 어떤 역할을 이행할지 참으로 우려되는 부분이다.

선거는 선거권을 가진 시민에게 많은 이득을 줄 수도 있지만 더 많은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분명한 점은 시민이 정책을 근간으로 후보를 선택하고 정당을 선택한다면, 화정주공 재건축사업과 같은 시민을 기망하고 일방적인 행정 추진은 앞으로 어려울 점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선거가 가지는 힘이자,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일 것이다.

민선 5기를 넘어 6기가 시작되는 지금, 광주시민은 이 점을 절대 간과하지 않길 진정 바랄 뿐이다. **경**

황홀과 슬픔의 공존

〈에드바르트 뭉크 - 영혼의 시〉

박지호 소비자정의센터 간사
jhpark@ccej.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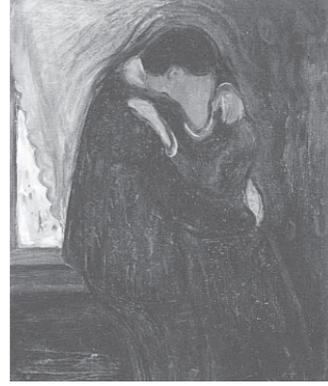
에드바르트 뭉크(Edvard Munch, 1863~1944)에 대해 얼마만큼 알고 있을까? 자세히 알지 못하고 '표현주의', '절규'(Der Schrei der Natur) 정도로 떠오른다. 전시회로 발걸음을 옮기지만 나는 뭉크 문외한이다.

'절규'라는 절대적인 대표작과, 계속되는 도난과 미스터리한 회수 과정 등은 뭉크라는 인물과 그의 삶을 흐리게 한다. 한 작가를 대표하면서 또 흐리게 하는 대표작 '절규'의 석판화 버전을 비롯하여 뭉크의 작품 99점이 국내에 최초로 전시되었다. 비록 오슬로 국립미술관에 있는 유화 작품은 아니지만 뭉크의 그 '절규'가 한국에 와 있다.

슬픔 그리고 끊임없는 불안

절규를 만나기 전 뭉크의 자화상들을 만나게 된다. 하지만 기묘하다. 자화상 속 뭉크의 팔이 삐로 묘사되어 있다. 의미는 찾을 수 없지만 결핍이 느껴진다. 한 자화상에는 '지옥에서의 자화상'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다. 죽음과 불안이 많은 작품들을 휘감고 있다. 동행한 이는 "어릴 적부터 체험한 부정적 감정이 느껴질 정도"라고 표현한다. 그렇다. 뭉크의 붓 끝의 방향은 가족사에 영향을 받았다. 5남매 가운데 둘째로 태어난 뭉크는 어머니를 5살 때 결핵으로 여인다. 10년

뒤 누나도 같은 병으로 죽고, 누이동생은 정신병에 걸렸다. 아버지와 남동생 역시 뭉크가 어렸을 때 죽었다. 혹자는 "어린 시절을 가득 채운 죽음의 공포와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 주는 불안은 평생 동안 그를 사로잡았고, 그의 작품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었다."고 뭉크에 대해 이야기한다.



▲ '키스' (The Kiss, 1897)

경험은 거울과 같다. 무의식 속에만 자리 잡고 있더라도 혹은 간접적으로 마주했다 하더라도 우리를 옥죄고 행위로 연결시킨다. 뭉크의 그림도, 판화도 옥죄어져 있다. 그의 슬픔 가득한 경험에.

사랑, 행복하지 않은...

"여성에 대한 집착과 불신, 혐오감, 강박이 있다" 동행한 이는 뭉크가 그려낸 여자와 그들이 입고 있는 빨간색에서 부정적인 느낌을 찾아낸다. 평생을 독신으로 산 뭉크가 여자를 왜 싫어하게 된 것일까? 한 블로그에는 뭉크가 사랑한 여자들

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하고 그 여지들에 대한 경험이 작품에 그대로 녹아있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명확치 않다. 경험을 한 몽크만 알 것 같다.

몽크의 그림 속에서 사랑은 양극단으로 교차하는 느낌을 준다. 몽크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단순한 황홀함으로, 아름다움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사랑은 때로 외면이고 사랑은 때로 집착이다. 사랑은 물과 같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 몽크에게 사랑은 그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작품에서도 아름다운 순간, 아름다운 대상에서 가장 슬프고 가장 아픈 순간을 기억하고 그려내려 간다. 그에 대한 느낌을 강하게 보여주는 그림이 이번 전시에서 여러 점 소개되었다. 그 대표적인 그림이 바로 ‘키스’이다.

몽크의 ‘키스(The Kiss, 1897)’는 남녀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담고 있다. 남녀의 얼굴은 하나가 되었고 남녀의 손은 그들의 사랑을 이야기 해준다. 분명 몽크의 ‘키스’는 사랑을 이야기 한다. 하지만 여러 판화 버전과 유화 버전을 번갈아 보며 ‘키스’가 주는 불안함을 만나게 된다.

이들의 ‘키스’에서는 사랑의 지속이 느껴지지 않는다. 왜인지 설명할 수 없지만 이 ‘키스’는 이들의 슬픔을 담고 있는,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를 입맞춤이다. 어두운 방 안에서 어두운 입맞춤을 하는 연인의 감정과 조금 열린 커튼 틈으로 보이는 밝은 창밖은 불안을 대변해준다.

이러한 감정이 기우이길 바랐지만, 몽크의 ‘큐



▲ ‘큐피트와 프시케’ (Eros and Psyche, 1907)

피트와 프시케(Eros and Psyche, 1907)’를 통해 또 다시 다가오게 된다.

큐피트(에로스)와 프시케에 대한 일화는 그리스 로마신화 중 좋아하는 이야기로 손 안에 꼽힌다. 물론 사람들의 시기 등으로 프시케가 시련을 겪기는 하지만 마지막에는 신들의 축하 속에서 큐피트와 천상에서 결혼을 올리게 되는 전형적인 ‘사랑’이야기이다. 프시케는 다소 우매한 면이 있지만 큐피트에 대한 지고지순한 사랑을 보여준다. 이 신화가 주는 의미는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사랑’이다. 오죽했으면 이들이 나온 아이가 ‘볼프타스(쾌락, 희열의 상징)’일 정도이니...

하지만 몽크의 ‘큐피트와 프시케’는 다르다. 그림 소개 속 이름이 없었다면 이 그림 속 남녀가 큐피트와 프시케로 절대 연결되지 않는다. 신화

속에서 등장하는 큐피트에 대한 소개는 이렇다.

“그의 금빛 고수머리는 눈과 같이 흰 목과 진홍색의 볼 위에서 물결치고 어깨에는 이슬에 젖은 두 날개가 눈보다도 희고, 그 털은 보들보들한 봄꽃과 같이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림 속 큐피트는 어둡다. 흘러내리는 붓 끝은 큐피트의 등에서 날개를 앗아갔고 봄꽃과 같은 빛은 그림자로 바뀌어 있다.

큐피트의 실수로 기존의 아름다움보다 한층 더 아름다워진 프시케 역시 다르지 않다. 그늘진 얼굴과 빛나지 않는 머릿결만이 가득하다. 눈은 큐피트를 바라보고 있지 않다. 나신임에도 둘은 어떠한 접촉도 없다. 그저 모든 걸 내려놓은듯한 프시케만이 존재한다. 이들은 아름다운 숲 속의 궁전에 있는 것이 아닌 비 오는 날 이별 한복판에 있는듯한 느낌을 준다.

몽크는 큐피트와 프시케의 아름다운 사랑이야기에서도 이들의 시련과 프시케가 느끼는 사랑의 슬픔만을 끄집어내고 있다. 그에게 사랑은 절대 황홀하지도 쾌락을 주지도 희열을 느끼게도 하지 않는다. 아름답지만 아름답지 않고 행복하지만 행복하지 않고 만족하지만 만족하지 않는 모순적인 가치이다.

사랑에 대한 모순적 정의 속에서도 동행한 이는 그림에도 불구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작품”이라고 이 두 작품을 좋아했다. ‘절규’로만 유명한 몽크에 대해 새로운 감정을 알게 됐다. 그는 불

안 속에서도 사랑을 갈망했지만 그 사랑 역시 모순적인 것을 깨달았고 이를 예술로 전달하는데 망설이지 않았다. 두 작품을 통해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다. 몽크는 절규 속에 너무 오랜 시간 갇혀 있었던 것이다. 우리 모두에게 말이다.

“흠쳐오고 싶다”

물론 이번 전시는 완벽하지 않다. ‘절규’로만 기억되고 있는 몽크에 대한 설명이, 친절함이 다소 부족했다. 몽크의 그림 속 내용이 발전되는 과정, 여자에 대한 집착, 불신에 대한 안내 등이 부족해서 감상하는 이들에게 의구심을 자아내게 했다. 특히 중간에 허무맹랑한 섹션이 있어 큐레이터를 소환하고픈 생각까지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전시는 몽크에 대한 궁금증을 더욱 갈구하게 해주었다. 그간 절규 속에서 불안의 대명사로만 자리 잡고 있던 몽크의 이야기가 궁금해졌다. 동행한 이는 수많은 유명 작품을 봐왔지만 이번 몽크 작품처럼 “흠쳐오고 싶다”란 생각이 든 건 처음이라고 한다.

예술에 전당에서 열리고 있는 몽크전은 10월 12일까지 계속된다. ‘절규’를 지워줄 것이다. 몽크는 불안을 그리고 슬픔을 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표현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진정한 가치로써의 사랑에 대해 끊임없이 알고자 했던 사람이다. 그는 더 이상 ‘절규’가 아니다. 



지금 아이들에게 필요한건 '관심'
〈침묵의 거리에서〉 오쿠다히데오, 민음사

윤성권 회원

「침묵의 거리에서」는 학교폭력과 왕따 관련된 내용을 담은 오쿠다 히데오의 신간이다. 여름방학을 앞두고 시골지역 중학교에서 '나구라'라는 학생이 숨진 채 발견되었다. 시골지역은 지역주민들이 상당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누가 공부를 잘하고, 그 부모는 무슨 일을 하며, 그 집안은 어떤 지 등 기본적인 신상에 대한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나구라는 지역에서 제일 부유

한 가문의 외동아들이고, 부모는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대규모 포목점을 운영한다. 또한 그 학생은 학교에서 친구들과부터 오랫동안 괴롭힘과 따돌림을 당해왔다. 나구라의 사망원인을 조사함에 따라 가해자로 불리던 4명의 친구들이 경찰에 소환되었고, 평온했던 지역은 점점 갈등이 생겨났다. 학교와 학부모간 갈등, 교사와 학생 갈등, 때론 교사들 사이에서 갈등, 학부모와 학생 갈등, 마지막으로 학부모 들끼리 갈등까지 작가는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갈등과 그들이 느끼는 심리상태를 시간적인 흐름에 맞추어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동시에 작가는 나구라의 평상시 학교생활을 친구들의 시각으로 묘사하면서 나구라의 성격과 심리상태를 독자가 유추하게 한다.

이 책은 주로 왕따 문제를 다양한 시점에서 풀어내는 데 집중하고 있다. 작가는 모든 일에는 흑백을 가릴 수 없는 측면이 있기 마련이고, 100% 악도 없고, 100% 정의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학교 폭력은 당사자가 같은 곳에 있는 한 언제까지고 이어지기 때문에 결코 끝이 없으며, 심지어 교사가 '왕따는 없어졌다'라고 말할 때, 그건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한다.

학교폭력과 왕따 문제는 대표적인 교실 사각지대다. 점점 사회가 각박해지고, 개인주의가 팽배하면서 가정, 학교, 사회의 결속력이 상당히 약해졌다. 과거보다 더 많은 노력으로 상황을 대응해야 한다. 과거에도 조금씩 따돌림이 존재했지만 최근에는 왕따가 자살문제로 확대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이사카코타로의 책 「칠드런」에서 "어린이는 영어로 child야. 그런데 복수가 되면 childs가 아니라 children이 된다 말이지. 그러니까 아이는 다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야"라고 설명한다. 어른들은 아이들의 세계를 마음만 먹으면 쉽게 파악할 수 있다고 착각한다. 교실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서 어느 때일수록 어른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친구들과 관계는 원만한지,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지는 않는지, 혹은 용돈을 자주 달라고 하지는 않는지 등 아이들의 세계를 알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경**



혼자하는 여행의 예고편
〈바람이 분다 당신이 좋다〉 이병률,달

이현아 국제팀 수습간사 hyunah.hana.yi@ccej.or.kr

멀리 떠나는 출장을 앞두고 버릇처럼 또 이병률 아저씨의 책을 꺼내 지그시 바라본다. 에메랄드 색의 옷을 입고 있는 「바람이 분다 당신이 좋다」의 글은 책 커버인 에메랄드 빛만큼이나 예쁘고 순수하다. 작가 이병률 아저씨의 찰랑대는 감성이 책에서 폴폴 바람을 일으키고 읽는 이의 마음을 살랑대게 하여 어디론가 떠나고 싶게 만든다. 아무데도 갈 수 없는 바쁜 일상 속에 이

책을 읽는다면 한강이라도 다녀와야 마음이 좀 진정 되기 때문에 필자에게는 바쁠 때 절대 펼쳐서는 안 되는 불온(?)서적이다.

여행산문집인 이 책은 여행지에서 겪은 에피소드가 연결고리 없이 한 편씩 펼쳐진다. 왜 그 곳에 가게 되었는지, 그 곳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여행지를 떠나 또 다른 여행지로 가고 싶은 마음을 보이고, 여행하면서 떠오르는 사람 등을 그려내는 이병률의 목소리가 할머니표 옛날 이야기처럼 전해진다. 낯선 곳에서 요동치는 타인의 마음을 읽으면서 여행 할 때의 내 마음을 비춰보게 된다. 외딴 곳에 혼자 있는 내 모습을 떠올리면 설렘과 낯설음 그리고 아이러니하게 느껴지는 편안함이 금세 그리워진다. 그래서 옷장 구석에 있는 배낭을 꺼내 짐을 꾸리고 싶은 마음이 뭉게뭉게 피어난다.

여행을 떠날 때 필자는 이 책을 들고 간다. 여행 가기 전에도 계획을 하기 보단 책을 보면서 내가 만나게 될 미지의 사람들에 대한 즐거운 상상을 한다. 이 책을 읽는 순간 난 벌써 떠나있는 상태가 된다. 작가가 여행을 하면서 만난 나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의 사연을 공감하면서 이미 여행의 가장 큰 기쁨을 먼저 느끼고 있다고 하면 이해가 되려나 모르겠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한 문단을 여기서 공유하며 마무리하고 싶다. 그리고 말해주고 싶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인 오늘. 인생에서 어떤 물질로도 구매할 수 없는 인연을 위해 홀로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방에 설렘만 가득 담아 떠나보는 것은 어떠신지?

#32의 마지막 문단이다. 돌아보면 그렇게 웃을 일이 아닌데도 배를 잡고 뒹굴면서까지 웃게 되는 적이다. 하지만 우리를 붙드는 건 그 웃음의 근원과 크기가 아니라, 그 세세한 기억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차곡차곡 남아 주변을 깊이 채우고 있는 그 평화롭고 화사한 기운이다. 인연의 성분은 그토록 구체적이지도 선명하지도 않은 것으로 묶여있다. 그래서 나는 누군가가 좋아지면 왜 그러는지도 모르면서 저녁이 되면 어렵고, 밤이 되면 저리고, 그렇게 한 계절을, 한 사람을 앓는 것이다. **경**

필자 권경원

2014년 7월 8일

MDGs와 에너지

정재원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
 국제위원회 위원



2000년에 있었던 세계 정상 회담에서 각국의 정상들은 2015년까지 세계의 절대 빈곤 감소 등 8가지 주요 목표와 18 가지의 세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었다. 바로 그것이 유엔의 새천년 개발 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인데, 이 목표에는 에너지에 관한 부분이 없다. 하지만 일상적으로 유엔은 에너지 빈곤의 완화가 저개발의 빈곤을 해결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임을 강조하고 있고, 에너지 빈곤 완화와 에너지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중요한 개발 의제로 삼고 있다. 따라서 MDGs의 주요 내용들, 즉 빈곤 감소와 유아 사망률 저하 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바로 에너지 문제라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는 다양한 경로와 다양한 에너지원을 통해 빈곤과 기아 감소, 교육과 건강 등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에너지 문제를 도외시키고 새천년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현지 주민들이 실제로 쓸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가 없다면, 온전한 원조의 혜택을 보기 어렵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원조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고려한다면, 빈곤을 완화하고 기본권을 보장하는 대안으로 태양광, 풍력, 폐기물 에너지 등 재생 가능 에너지가 주목받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또한 에너지는 에너지를 획득하기 위해 노동에 시달리는 현지 주민들에게 더 많은 시간적 여유와 다양한 기회를 창출해 주어 빈곤 완화 뿐 아니라 질병 감소와 평화 구축에도 기여를 할 수 있다.

특창출과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국제협력 이 요구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인 대단위 성장 보다는 지역 단위의 자립경제 발전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고, 지역 공동체 발전이나 협동조합 형성이 국가적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특히 서구의 사례에서 보듯,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경우 협동조합 방식의 발전이 효과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향후 친환경적 개발협력의 방향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새로운 방법 '에너지 협동조합'

이러한 맥락에서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의 역량을 동원, 참여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고려되고 있는 '공동체 신재생 에너지'라는 개념이 확산되고 있다. 지역 사회가 직접 참여하여 에너지효율화와 절약을 통해서 에너지 소비를 절감하고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지역에서 에너지를 생산해 낸다는 것이다. 이런 공동체 에너지는 지역 주민들이 지출하고 있는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지역에 존재하는 빈곤층들의 에너지 복지를 향상하며 전반적인 과정을 통해서 지역의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부가적인 이점들도 강조되고 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전 세계적 경제위기, 탄소 가스 배출 등으로 인한 기후 변화, 식량 및 식수 위기, 부국과 빈국 간 양극화, 국내 빈곤 및 양극화 등의 지구적인 문제를 고려한 협력 사업이 발굴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점차로 형성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자연생태계와 인간발전의 조화를 파괴하는 개발과 성장 모델을 지양하고, 생태적 사고에 입각한 협동경제발전, 인간복지향상에 입각한 개발 모델을 추구, 빈곤퇴치를 넘어 자조와 자립, 그리고 자치능력을 고양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소



▲ 지구온난화로 인해 최빈국에서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에너지를 얻는 것이 더 어려워 졌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유럽에서 확장되고 있는 에너지 협동조합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에너지 협동조합이 제시하는 ‘공동체 에너지’는 단순히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재생 에너지 생산의 이익을 공유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지역 공동체가 직접 소유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 방안 중 하나가 바로 에너지 협동조합인 것이다.

원유 생산 축소를 예상하고, 기후 변화에 대비하려는 공동체들의 네트워크 운동으로서 지역 도시와 공동체의 사회적, 생태적 회복 능력을 길러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러한 운동을 통해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고, 자족적 농업 생태계 원칙을 통한 지역 차원의

공간의 재구축을 도모해야 한다. 지속 가능한 토지와 물 사용을 위한 설계에 따라 인간은 환경에 통합되고, 지역 사회에 기반을 둔 농업과 식량 체계를 만들며, 생태적 활동을 다시 살리고 폐기물을 줄이거나 에너지화하여 자연의 사이클을 회복해야 한다. 이러한 공동체는 이윤이 아니라 공동체를 재생산함으로써 환경 보호와 사회적 연계를 강화하며, 공동체

간 협력과 연대를 장려하는 등 기존의 개발 담론과는 판이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식량과 물 못지않게 개도국과 최빈국들에 대한 에너지 지원은 매우 절실하다. 화석연료 에너지를 중심으로 선진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 3세계의 개발이 제약되거나 혹은 과도하게 이루어지곤 한다. 또한 개도국들의 빈곤 퇴치 등의 MDGs 목표 달성을 위한 개발협력과정에서 환경 문제와 충돌이 일어나고, 에너지 효율화 문제를 넘어선 신재생 에너지 개발 문제 등은 관심의 순위에서 밀려나곤 한다. 그리고 기후 변화로 인해 가장 많은 고통을 받고 있거나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은 최빈국, 그 중에서도 극빈층이다. MDGs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은 서로 얽혀 있는 문제이지만,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는 마치 관련성이 적은 것으로 생각하기 쉽상이다. 에너지 혁명을 통해 우리는 기후를 비롯한 환경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빈곤 퇴치와 사회불평등 해소에도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것이다.

재생 가능 에너지를 이용한 지속가능 발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국제구호단체나 신재생에너지 관련 NGO 등에서는 최빈국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 빈곤 해결을 위한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이들은 재생 가능 에너지를 통해 개도국과 최빈국들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보호,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빈곤 퇴치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도국과 최빈국이 선진국의 고탄소 발전 궤적과 같은 대규모 중앙 집중형의 화석, 핵 연료와 대규모 수력 발전과 같은 에너지 시스템에서 탈피하여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 지역 자립형 에너지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기후변화를 완화하고, 환경은 물론 사회,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특히 태양과 바람, 폐기물 등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여 이들 국가들의 지역공동체들에 자립형 재생가능에너지들의 공급은 지역의 에너지 자립뿐 아니라 빈곤, 환경, 일자리 창출 문제에도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다.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하게 되면 국제적으로 매년 1800억 달러 정도를 절약하게 된다. 이는 MDGs를 달성하기 위한 추가 지원에 드는 비용과 거의 일치한다. 보다 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위해 석탄과 석유, 그리고 가스에 들어가는 연간 2500 억 달러의 보조금을 재생 가능한 에너지 분야로 전환할 수 있다면, 충분히 기존의 에너지 생산 구조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안전도에서도 월등한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 2030년까지 전기 생산 분야에서 이산화탄소의 방출을 절반 정도로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생산보다 약 10분의 1 정도의 비용이 들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존재한다. 이제 핵마피아, 석유 마피아들의 논리를 벗어나 ODA, 나아가 국제개발협력의 틀 속에서 개도국들과 저개발 국가들에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자립 마을을 만드는 사업 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경**



경실련과 함께하는 문화 유람, 컬쳐노마드를 마치며



안광수
컬쳐노마드 1기
참가자

대학에 갓 입학한 새내기 시절, 나는 경실련이 어떤 곳인지, 무얼 하는 단체인지 알지 못했고 심지어는 '전경련'과도 혼동할 만큼 무지했다. 복학생이 되어 동아리와 학생회 생활을 하며 사회를 배워나갈 때 - 내가 복학하던 때는 08년, MB 집권 초창기였고 미국산 쇠고기 문제와 대운하 사업에 대한 논란으로 시끄러웠다 - 경실련의 이름이 실린 기사를 자주 찾아볼 수 있었지만 여전히 나에게 경실련은 신문기사와 인터넷으로만 만날 수 있는, 활동가 보다는 행정가의 색깔이 느껴지는 단체였다. 우연히 보게 된 '컬쳐노마드'를 신청하게 된 건 그런 경실련을 옆에서 직접 보고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큰 계기였다. 두 번째 이유는 '영화, 다큐, 전시, 공연 등을 함께 보고~' 라는 컬쳐노마드의 매력적인 캐치프레이즈.

컬쳐노마드는 3월 19일부터 5번의 영화 관람과 각각 한번씩의 다큐, 전시회, 연극 관람을 통해 8주간 진행됐다. 3월 19일의 첫 모임과 이후 일정 중 영화 관람은 모두 혜화역의 경실련 회관에서 진행됐고, 다른 일정들은 전시, 공연이 열리는 장소에서 모여 관람했는데 주제는 전쟁, 주거, 여성, 평화 등의 카테고리로 나뉘었던 것 같다. 개중 인상적이었던 것은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열린 전시회 '아파트인생'을 관람했던 3주차였다. 60년대 말 무허가 철거민들을 수용하기 위해 지어진 금화시범아파트부터 지금의 주상복합아파트까지 아파트는 현대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거문화다. 20년 이상 아파트에서 살아 온 나에게 이 전시회가 보여주는 아파트들의 과거는 일종의 향수였다. 실제로 주민이 살던 서초 삼호아파트의 한 집을 전시장에 그대로 옮겨놓은 것을 보며 90년대 아파트촌의 생활을 떠올린 것은 나뿐만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전시회의 이면에는 무허가 건축물에 살다 갈 곳을 잃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분양권을 얻은 사람들만이 갈 수 있었던 산비탈 위의 시민아파트와 거주권을 요구하는 빈민들의 투쟁이 있었다.

글머리에 적었던 컬쳐노마드 캐치프레이즈의 생략된 부분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이다. 본 모임이 끝나면 간사님들과 참가자들은 간단한, 때로는 간단하지 않은 뒷풀이를 하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다. 그날의 모임 주제에 대한 이야기도 좋았고, 그때 그때 생각나는 화제거리를 꺼내며 의견을 주거나 받거나 하는 편안한 자리였다. 본 모임 만큼이나 뒷풀이가 즐거웠는데 본 모임에서 서로 인사를 나눴으나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친해지고 서로에게서 배울 점을 찾을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인연을 맺은 분들 중 경실련 회원이기도 한 황도수 건국대 법학과 교수님이 있다. 교수님께서 뒷풀이 때마다 당신의 생각과 여러 조언들을 재미있게 풀어주셨는데 이런 분을 알게 된 것이 이 '컬쳐노마드'에서의 소득이 아닌가 싶을 만큼 유쾌하고 올곧은 분이다.

컬쳐노마드 프로그램은 좋았다. 경실련의 회원이 아닌 나도 참여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그동안 잘 알지 못했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라는 단체를 직접 옆에서 바라보고 알아갈 수 있는 기회였다는 점에서 좋았다. 프로그램의 주제나 깊이도 시민들을 대상으로 고민한 것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그런 면에서 나 뿐만 아니라 경실련에 대해 궁금해 했거나 경제정의에 관심을 가졌던 다른 시민들도 함께 하기 좋은 '친근한'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다.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 저조한 참여인원이다. 보통 3~7명 정도의 숫자로 모임이 진행되었는데 보다 다양한 경로로 홍보했다면 어땠을까?

컬쳐노마드는 경실련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형태의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단체와 정당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더불어 오프라인 모임을 가지며 다양한 면대면 활동을 가지고 있다. 세상은 점점 정보화되고 온갖 SNS가 인기를 얻고 있지만 활동이 깊이 있게 유지되거나 개개인간의 유대가 형성되기 쉽지 않은 온라인 커뮤니티의 한계가 나름 명확해지지 않았나 싶다. 그런 한계를 오프라인 모임으로 상쇄하며 꾸준히 젊은 피를 경실련에 인입시키는 것이 컬쳐노마드 기획 당시의 구상이 아니었을까? 과거의 나처럼 경실련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함께 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음 2기, 3기 컬쳐노마드가 이런 분들을 모아 더 크고 알찬 결실을 맺길 바라며, 그 자리에 나도 함께 할 수 있길 바라 마지않는다. **경**



“지방선거 특집, 서울 말고 지방도 비교했으면 좋았을 것”

최예지
회원홍보팀 간사
cyj@ccej.or.kr

표지

이총희 : 6.4 지방선거에 유권자의 관심을 바라는 의도를 잘 나타낸 표지이다. 특히 지방자치의 싹을 피운다는 의미가 좋았다.

송하동 :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의 이미지를 잘 담아낸 것 같다. 그리고 투표도장을 물에 비유한 것 역시 좋았다.

광고

송하동 : ‘MSG 안전’ 광고주가 누군지 궁금하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의 새로운 사업으로 오해할 수 있을 것 같다.

도시인

이총희 : 성수대교 교각 붕괴 현장사진은 이 땅의 안전에 대한 현실을 반증하는 자료라 생각된다. 안전사고 없는 국가실현이 꽤나 멀리 느껴져 안타깝다.

송하동 :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안전이 최대 화두로 떠올랐는데, 시의성 있는 기획이라고 생각한다. 세느강변과 템즈강변 사진도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최유미 : 그간 도시에서 벌어졌던 사건 사고들에 대해 정리하면서, 안전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대응이 어떠했는지를 상기시

켜주었다는 점에서 좋은 글이었다고 생각한다. 세월호 관련 수많은 기사와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싶었지만, 그래도 한번쯤 짚어볼 만 했다고 생각한다.

동승동칼럼

송하동 : ‘육법당’ 냄새가 짙다는 현 정부 인사에 대한 평가가 인상 깊었다. 박근혜 정부의 인사는 ‘참사’라고 불릴 정도로 문제시되고 있는데, 현 정부 인사 문제는 다음 호 기획특집 아이템으로도 괜찮을 것 같다.

최유미 : 칼럼의 내용 자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칼럼을 읽는 사람들이 일반 독자임을 감안한다면 이전 호처럼 독자들에게 쓰는 편지 같은 느낌으로 대통령전상서 같은 제목이었어도 어색하지 않았을 것 같다.

기획특집 : 6.4 지방선거

송하동 : [기획특집 ① 후보선택도우미]

- 월간 경실련 이번 호를 선거가 끝난 뒤에 받아 아쉽다.

- 후보선택도우미 홍보가 부족했던 것 같다. 내가 접한 홍보는 경실련 홈페이지와 회원만 받아 볼 수 있는 문자가 전부

였다. 얼마 전 정치학 전공 수업에서도 “왜 시민단체들이 후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는 얘기가 나왔었다. 경실련 후보선택도우미를 소개 했었는데, 교수를 포함해서 다들 전혀 몰랐다는 눈치였다.
- 박원순 후보의 입장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것이 많다. 다음 후보선택도우미 때는 보완책이 필요할 것 같다.

[기획특집 ② 핵심정책과제]

‘비급여 없는 공공의료 실현’은 지자체 권한 밖의 일인 것 같다. 지방자치로 실현 가능한 정책과제라면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상당히 많은 정책과제를 나열했는데,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표를 첨부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

[기획특집 ③ 서울교육감 토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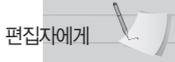
지역경실련을 통해 다른 지역에서도 교육감 후보 초청 공약 토론회를 열었으면 좋겠다.

최유미 : [기획특집 ① 후보선택도우미]

- 서울시장을 기준으로 후보의 정책을

비교하는 내용은 좋았다고 생각한다. 처음에는 단순 비교에 그친 것이 아닌가 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판단을 독자에게 맡기는 것이었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지금의 내용구성이 더 중립적이고 합리적이었다고 생각한다. 쟁점 사안이 많았던 다른 지역도 간단히 비교를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 번외로 언급하고 싶은 내용은, 투표를 해야 하는 국민들에게 전해지는 조언의 내용이 한결같다는 점이다.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시의원, 시장, 구청장 모두 내거는 공약이 비슷하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지방자치에서 정치인들이 담당해야 하는 역할에 대해서도 고찰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지금의 지방선거는 투표하는 사람 입장에서든 정당 고르기 그 이상을 바라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방자치란 좋은 것이다.’ 이런 것 보다 지방자가 필요한 이유, 담당해야 할 역할 등을 차분히 돌아보는 것 또한 시민의 정치참여를 독려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시사포커스 1

최유미 : 특별기고문과 내용이 상통한다고 보여진다. 시사포커스 1과 2 사이에 기고문이 있었어도 어색하지 않았을 것 같다. 차이라면 시사포커스가 근거있는 자료와 수치에 기반해서, 현재의 공직윤리라는 것이 어느 수준에 와있는지, 실질적으로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돕는다는 점이 더 좋았던 것 같다.

송하동 : 각종 ‘피아’가 난무해서 피로감이 느껴진다. ‘취업제한 기간 연장’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금융 등 다른 부문이나, 해외사례 등과 비교해서 한국의 현행 공직자 취업제한 기간이 과연 짧은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사포커스 2

송하동 : PEF의 뜻을 알아보려고 각주를 봤는데, ‘Buy/Out의 투자전략’이라는 또 다른 생소한 용어가 등장한다. 좀 더 풀어 썼으면 어땠을까 싶다.

최유미 : 37쪽 ‘규제개혁은 기본적으로 효율성 증대와 경쟁촉진 등 공익의 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규제개혁의 효과와 혜택이 특정집단이나 소수에게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에게 체감되도록 해야 한다.’ 라는 문장에 의문을 가진다.

본문에서 언급한 ‘규제’들은 그것이 해제되었을 때 엄밀히 말해서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경쟁을 촉진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오늘날의 사회에서 규제란 평등 또는 균형이라는 관점을 추구하기 위해 적용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를 개혁한다는 것은 그 목표를 더 잘 추구하기 위해 규제를 손보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본문의 문장은 규제를 개혁하면 무조건 완전경쟁을 추구하게 하고 그를 통해서 공익이 커진다는 시장주의적인 시각만 존재하는 것 같다. 지금까지의 규제들 중 프랜차이즈 가맹점포간의 거리제한 등은 그 수혜자가 제한적이고, 경쟁을 제한한다. 그러나 그 규제를 해제했을 경우 공익이 증대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 경실련의 지금까지의 행보로 보았을 때에도, 규제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문장을 받아들일 독자에게 은연중에 ‘경쟁만능주의’를 심어주는 것은 아닌가 싶다.

이충희 : 모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환경호르몬이 있는 색연필 제조 과정에 대한 규제는 오히려 강화할 필요가 있듯이 자연환경과 건강에 위해가 있는 규제완화 일변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통일마당

송하동 : 통일문제는 국제관계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이번 통일마당 글은 상당히 의미 있고, 깊이도 있는 글이었다고 생각한다.

경실련 사람들

최유미 : 지방행정에 대해 좀 더 세부적으로 알 수 있었던 좋은 기사였다고 생각한다. 지방 재정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의 의사결정구조에 대해서도 다룬다면 지방자치의 필요성, 중앙정부의 영향력 등을 파악하기 쉬워지고 사람들이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각 단계별 의결기구와 정치인들이 무엇을 해야 하고 그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송하동 : 지방 재정 자립도를 높임으로써, 지방 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세계 개혁을 경제정책팀과 정치입법팀의 공동 사업으로 진행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당장 주목 받고 있는 이슈에 일일이 대응하기 보다는, 경실련의 위상에 걸맞게 의제 설정자로서의 기능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이충희 :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한 시민교실 운영, 시, 도 각계 의견수렴의 옴부

즈맨 역할 활성화 등도 고려될 수 있다. 선거에서 당선자들이 공약을 제대로 지켰는가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유권자가 직접 감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지역이야기

송하동 : 담배 1,648만갑을 ‘성인 1,648만 명이 동시에 한 갑씩 소비’할 수 있는 양으로 부연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 같다. ‘근로자 모두에게 담배 한 갑씩 주고도 남을 양’이라든지, 아무튼 다른 표현이 더 좋았을 것 같다.

경제기사다시읽기

최유미 : 연봉공개가 왜 이루어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경실련의 역할도 알 수 있었고, 앞으로 우리가 어디에 주목해야 하는지도 짚어준 기사였다. 다만 이전의 경제기사 다시 읽기의 내용과는 살짝 거리가 있다는 느낌도 들었다. **경**

■ [민자사업 제도 개선안] 특혜, 반칙, 부패 사슬 고리 끊어야 를 읽고

@dhkim_TerraCG (6.7)

건설사 중심의 민간투자사업을 금융사업 중심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함

▶ 민자사업 정보상시공개화 의무화를 시켜 투명성과 감시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사업비내역서, 실시협약서 등 중요자료를 상시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자본조달 시 자기자본 비율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권오인 국책사업감시팀 팀장 (@daebak_ohin ▶)

■ 인천공항철도 매각 즉각 중단하라 : 장기적으로 코레일 경영악화와 공공성을 훼손시킬 인천공항철도 매각 즉각 중단하라 를 읽고

@pearlkmj (6.13)

인천공항철도 매각 중단하라.

▶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실련도 감시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최승섭 부동산감시팀 부장 (@grandno9 ▶)

■ [기자회견]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 지명 철회 촉구 기자회견 :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 지명 철회 촉구 기자회견> 보고

@0082115 (6.16)

적극 지지.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꾸어야 함.

▶ 최소한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국무총리를 영원했건만, 이 정도로 상식에 정면 대치되는 인사를 하다니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결국 후보자의 자진사퇴로 마무리되었지만 사퇴의 모습도, 정홍원 총리 유임이라는 후속대책도 모두 씁쓸함을 자아냈죠. 더불어, 계속되는 인사 참사를 보고 있자니 가슴이 답답해져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제도를 타할 것이 아니라 국무총리에 이어 국무위원까지 이어지고 있는 인사 참사에 대해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유애지 정치입법팀 간사 (@yustina0264 ▶)

■ KT 개인정보유출 피해자 2,796여명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KT 개인정보유출 피해자 2,796여명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privacyboho (6.26)

개인정보보호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 개인정보는 곧 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미 유출된 정보라면 주민번호 변경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다가올 유출 피해를 막기 위해 경실련은 제도개선, 소송 등 모든 수단을 동원 할 예정입니다. 박지호 소비자정의센터 간사 (@jh_justice ▶)

신입회원 한마디 "반갑습니다! 회원님"

김도영 | 정의로운 사회에 일정부분의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합니다.

김재섭 |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김철호 | 경실련은 한국 사회에서 꼭 필요한 존재다.

문차호 |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박병섭 | 활발한 사회문제해결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박태영 | 경제사회 전반에 뿌리 박혀있는 부조리와 비도덕적 행태들과 잘못된 사회경제 제도, 관행, 의식구조들이 올바르게 정립되는 데 밀알이 되고 싶습니다.

이종수 | 주권을 가진자로서 관심과 책임, 의무에 충실하기 위해 참여합니다.

정성심 | 저한테는 소중한 1만원입니다. 이 사회에서 힘없는 시민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갑모 | 나 혼자 행복하려고 해봐야 전혀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의 행복한 삶을 의식적으로 보장해주려 노력하고 배려해준다면, 결과적으로 나를 포함한 우리가 서로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달용 |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기고를 받습니다. 사는 얘기, 궁금했던 사항에 대한 질문, 경실련 운동에 대한 의견, 「월간 경실련」을 읽고 느끼신 점 등을 자유롭게 적어서 보내주세요.

이메일 news@ccej.or.kr | 트위터 @cyberngo | 전송 02-741-8564~5





경실련은 하루하루 시민과 함께 걷습니다



2014. 07

- 07.17 방통위의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회의에 대한 시민단체 입장 발표
- 07.16 "이스라엘 정부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민간인에 대한 공습을 즉각 중단하라" 성명 발표
- 07.15 국회의 세월호 특별법 제정 파행에 대한 입장 발표
정부의 LTV 완화에 대한 입장 발표
- 07.10 '시민단체, 망중립성 입법운동 전개' 성명 발표
애플 '수리약관' 공정위에 약관심사 청구 제기
"의료계 손실을 빌미로 한 무분별한 수가인상 반대" 성명 발표
- 07.09 "임대소득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사진1
- 07.08 시판 빵류 GMO 표시 실태조사 결과 발표
- 07.07 위례신도시 분양원가 분석 결과 발표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 검찰 고발 및 사퇴 촉구 기자회견 ▶사진2
- 07.06 애플, 구글 앱마켓 이용약관 시정조치에 대한 입장 발표
- 07.02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우려스럽다." 성명 발표
'통일원칙을 재검토하다' 창립 20주년 연속토론회 개최
- 07.01 정부와 새누리당의 분양가상한제 폐지 추진협약에 대한 입장 발표
GMO 표시현황 실태조사 결과(간장, 된장, 고추장, 청국장 등 장류) 발표
"박근혜 대통령, 인사청문회 개선 운운은 견강부회" 성명 발표



사진1



사진2

2014. 06

- 06.30 "iMBC, 이용자 감시하는 콘키퍼 사용 즉각 중단해야" 성명 발표
- 06.26 학교주변 호텔건립, 고용창출효과 조사분석 결과 발표
KT 개인정보유출 피해자 2,796명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사진3
공정위, 멜론 등 4개 사업자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시정조치에 대한 입장 발표
정부합동 자동차 연비검증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 발표
- 06.25 대형병원 경영이익 축소 실태 조사 결과 발표
문화체육관광부의 학교주변 호텔건립 추진에 대한 입장 발표
- 06.24 GMO 표시현황 실태조사 결과(대두유, 옥수수유, 카놀리유 등 식용유) 발표
정부의 유주택자 청약 완화에 대한 입장 발표



사진3

- 06.23 위약금 없는 KT해지를 위해 집단분쟁조정 참가자 모집
- 06.20 노대래 공정위원장의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 폐지발언에 대한 입장 발표
- 06.18 금감원장 DTI발언에 따른 논평 발표
"박 대통령, 시간끌기로 국민기만 말고 문창국 지명철회하라" 성명 발표
- 06.17 LTV, DTI 완화 방침에 따른 논평 발표
시민사회에서 바라보는 새마을운동 ODA와 국제개발 사업 토론회 개최
- 06.16 문창국 국무총리 후보 지명 철회 촉구 기자회견 ▶사진4
- 06.13 인천공항철도 매각에 대한 입장 발표
"국격훼손 문창국 총리 지명 철회해야" 성명 발표
정부의 임대소득 과세 수정안에 대한 입장 발표
- 06.11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정비촉진 위한 정부의 규제완화에 대한 입장 발표
- 06.10 "회의록 유출사건, 특검 도입으로 사법정의 바로 세워야" 성명 발표
병원 영리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설립 강행 추진 규탄 기자회견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총리 내정에 대한 논평 발표
- 06.05 서울시교육감 선거결과에 대한 논평 발표
6.4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논평 발표
6.4 지방선거 평가와 지방자치 발전 방안 토론회 개최 ▶사진5
- 06.03 6.4지방선거 17개 광역시도지사 주요후보 민간투자사업 공약 실태조사결과 발표
- 06.02 "대북강경책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한 김관진 안보실장 인사" 성명 발표
경실련 2014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공약 평가 @광주시장



사진4



사진5

2014. 05

- 05.29 후보선택도우미 가동
지방선거 투표 참여 독려 및 정책선거 캠페인 실시
경실련 2014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공약 평가 @충북도지사
- 05.28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철회 촉구
서울교육감후보 공약평가 결과 발표
경실련 2014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공약 평가 @경기도지사
- 05.27 교통사고 심각성과 보행자 안전대책 토론회 개최
공정위의 무점포창업 5개 업체 불공정계약서 시정조치에 대한 입장 발표
경실련 2014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공약 평가 ⑦대구시장
국가인권위원회의 주민등록번호제도 개선 권고에 대한 입장 발표
'동일이념 무엇으로 할 것인가?' 창립 20주년 연속토론회 개최 ▶사진6
- 05.26 경실련 2014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공약 평가 ⑤인천시장
경실련 2014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공약 평가 ⑥서울시장
- 05.23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교체 없이 국정쇄신 어려워" 성명발표
"이제는 5.24조치 해체 할 때다" 5.24조치 해체촉구 기자회견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보인권 보장할까?" 인권시민단체 인권위 감시 및 모니터링 강화



사진6

* 경실련의 모든 성명 및 발표자료는 경실련 홈페이지 (www.ccej.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입 회원님을 소개합니다. 모두 환영합니다.

(전국 신입회원 182명, 가입일: 2014년 5월 17일~2014년 7월 15일)

강경수	김도영	김예원	김민희	민준형	박태원	신미경	이경애	이종택	정연숙	최달용
강대준	김동우	김용갑	김현중	박근해	박한정	신민선	이경희	이현정	정의성	최병윤
강명선	김동일	김용만	김형걸	박기학	배기재	심미애	이규은	임강민	정진수	최은정
강성훈	김동호	김용미	김형중	박덕룡	백승수	심해진	이대복	임기춘	정혜영	최준옥
강영원	김동환	김은모	김환국	박문태	사정환	양금석	이린우	장은영	조규호	한대수
강정호	김문한	김은정	김훈태	박병식	서한희	오영희	이법석	장재식	조병걸	한상복
강진성	김미현	김재섭	나승일	박봉수	석 일	오상엽	이선우	전정렬	조병호	홍성태
고재일	김병근	김정식	나중훈	박상필	석 준	오정림	이선희	전창해	조은경	홍순민
공연인	김보람	김정천	나중훈	박서연	신다윗	우상동	이성현	정만희	조하영	홍우나
공영서	김성중	김종운	네모토마사쓰구	박석민	선중국	유재아	이성호	정명숙	조희선	화일신기(주)
권혁중	김세곤	김진찬	노희옥	박순자	상광철	윤재일	이수한	정명자	조희선	황광석
권형준	김세희	김채운	노선봉	박인근	성주우	윤득구	이승준	정미주	차연옥	황영미
권경민	김승희	김정호	동병희	박정환	송원덕	윤영부	이 옥	정삼민	채 술	
김근수	김수진	김태곤	류진호	박정훈	송재규	윤종대	이위덕	정상철	최감모	
김나경	김안용	김태연	마리아	박종관	송희연	이건수	이의현	정석운	최광섭	
김남희	김연옥	김태형	문차호	박주영	송희연	이경식	이정민	정성길	최길순	
김덕중	김영재	김태형	문차호	박태영	신도희	이경식	이종수	정연길	최길순	

본부	강창길	구수정	김경도	김대현	김병수	김세진	김완옥	김인영	김중환	김창환	김현석	나병현
고려대학교2과협회	강창구	구숙경	김경민	김대호	김병수	김소라	김왕식	김인영	김주남	김재윤	김현성	나판수
한국산업개발경제포럼	강창균	구자홍	김경배	김대훈	김병수	김승철	김용남	김인태	김주연	김 천	김현수	남기원
(주)동성산업개발	강철규	구정모	김경수	김도준	김병주	김수영	김용득	김인호	김주영	김천성	김현옥	남상권
브이앤비(주)	강철승	구혜인	김경수	김도형	김병학	김숙희	김용석	김일구	김주영	김천중	김현정	남석준
아름다운한의원	강태경	권경무	김경용	김도희	김병호	김승보	김용섭	김일수	김주중	김 철	김현주	남영진
피터엘월드스텍	강혜정	권구혁	김경운	김동규	김보경	김시영	김용숙	김재구	김 준	김철주	김현주	남현호
고고하우스	강홍천	권규항	김경준	김동규	김복환	김애자	김용식	김재구	김준배	김철홍	김형규	남현주
군산경실련	강민수	권동현	김경호	김동균	김복근	김양규	김용준	김재길	김준석	김철환	김형균	남호원
김보라미	계충미	권득용	김경호	김동운	김 삼	김양규	김용직	김재일	김준식	김철아	김형원	남호현
가상존	고강석	권봉철	김경환	김동윤	김상경	김양수	김용찬	김재하	김준영	김충환	김형조	노경택
강경수	고경일	권상용	김경희	김동현	김상균	김양진	김용철	김재환	김준한	김치수	김형준	노관숙
강국신	고동성	권상주	김관영	김동호	김상균	김연주	김용철	김정돈	김중기	김태균	김형진	노동식
강내원	고승일	권성윤	김관용	김동환	김상열	김연주	김용태	김정수	김지연	김태수	김혜경	노연경
강대옥	고영희	권소영	김광현	김득기	김상영	김영건	김용하	김정신	김지영	김태수	김혜련	노영수
강덕순	고은진	권순범	김국주	김만수	김상우	김영경	김용호	김정현	김지혜	김태연	김혜숙	노우호
강명구	고인수	권순용	김귀해	김만호	김상중	김영미	김유비	김정일	김지혜	김태완	김혜순	노원경
강문희	고지석	권영준	김규민	김연중	김상현	김영범	김유빈	김정중	김지호	김태용	김혜영	노재훈
강민구	고진강	권영진	김규범	김영규	김생수	김영복	김원석	김정천	김진구	김태경	김혜영	노정호
강병국	고형산	권영한	김규훈	김영기	김석환	김영선	김원태	김정하	김진만	김태현	김혜영	노진주
강병희	고형석	권요진	김근상	김명목	김선자	김영섭	김용홍	김정한	김진명	김태현	김호균	노태균
강상구	고홍민	권용규	김근수	김명숙	김선필	김영순	김유진	김정호	김진수	김태형	김호성	노희철
강선미	고희은	권은희	김근철	김명애	김선희	김영실	김유찬	김정호	김진아	김태호	김희식	단호섭
강성주	공병욱	권율학	김기숙	김명임	김성균	김영애	김유찬	김정호	김진영	김태훈	김희연	라운흠
강신우	공정표	권일민	김기열	김명철	김성수	김영은	김유환	김정훈	김진욱	김태훈	김희관	류경수
강영화	공진하	권준기	김나리	김명환	김성숙	김영재	김윤기	김종걸	김진현	김태훈	김희관	류동훈
강영식	곽기훈	권준석	김남덕	김무준	김성식	김영주	김윤두	김종근	김진호	김태진	김희규	류명현
강원호	곽남준	권준우	김남선	김문환	김성연	김영주	김윤태	김종덕	김진호	김하나	김희수	류시문
강은현	곽새별	권 찬	김남연	김미경	김성일	김영준	김윤희	김종록	김찬기	김학수	김희선	류연희
강일환	곽지옥	권철민	김남훈	김미선	김성중	김영준	김윤희	김종록	김찬기	김학수	김희선	류연희
강재혁	곽효성	권태환	김달환	김미진	김성천	김영철	김은영	김종민	김찬석	김해성	김후승	류지성
강정훈	곽해남	권태수	김대균	김민섭	김성태	김영출	김의도	김종배	김찬형	김해수	김희규	류종렬
강정희	구경이	권형년	김대선	김민수	김성필	김예송	김의수	김종섭	김찬호	김해님	김희영	류형욱
강주현	구길두	권혁민	김대성	김병각	김성호	김예원	김인근	김종숙	김창균	김행선	김희철	류화근
강지영	구민진	김재호	김대우	김병구	김성훈	김완래	김민선	김종우	김창범	김현동	나권일	미미영
강진영	구성찬	김갑배	김대중	김병성	김세은	김완배	김민숙	김종찬	김창식	김현덕	나명희	맹광영

맹성렬	박세원	박종태	백복수	송강욱	안영호	우성훈	윤인오	이동준	이소현	이재림	이호영	전병석
맹주철	박세훈	박주은	백요한	송기민	안영훈	우지영	윤일성	이동준	이승수	이재욱	이호욱	전병순
문광기	박수경	박준수	백은정	송기성	안완용	원 국	윤재용	이동준	이수연	이재완	이화영	전병식
문금희	박수완	박준영	백정숙	송명원	안용식	원대한	윤종대	이동한	이수연	이재은	이화주	전봉양
문미란	박수행	박준형	백진현	송미영	안인화	원동환	윤종빈	이동현	이수영	이재환	이 훈	전봉진
문상준	박수형	박준철	변동철	송병록	안정혜	원영진	윤종호	이동호	이수진	이재훈	이훈섭	전상룡
문석진	박순규	박지은	변상해	송수영	안종범	원재환	윤종식	이동호	이순기	이정남	이홍록	전상욱
문세영	박순기	박지혜	변재근	송영호	안종복	원종호	윤지성	이명규	이순배	이정영	이희중	전상철
문소상	박순우	박지호	변준섭	송용석	안종환	원혜영	윤진철	이모세	이승기	이정현	임건목	전용배
문인섭	박순상	박지호	사동천	송원기	안지현	원희식	윤치업	이무송	이승대	이정희	임명호	전용일
문종원	박승옥	박지환	서경호	송인섭	안진걸	유관영	윤한필	이민아	이승섭	이정희	임 삼	전우영
문대현	박승진	박진규	서동일	송인운	안진호	유관준	유효상	이민우	이승우	이정희	임서구	전진호
문 희	박양재	박진순	서미연	송태교	안철원	유기선	이갑수	이범석	이승현	이종건	임세운	전재현
민남미	박영규	박진홍	서순탁	송하동	안현구	유기찬	이강운	이범재	이신호	이종규	임승기	전정재
민병욱	박영규	박찬영	서승완	송호영	안효정	유기청	이경도	이병관	이아리	이종길	임용기	전창훈
민선옥	박영기	박창민	서영덕	신경희	안희숙	유기현	이경수	이병주	이애경	이종수	임용섭	정경수
민승현	박영남	박창임	서영상	신규철	안희철	유남식	이경숙	이봉숙	이연석	이종욱	임장원	정경욱
민희숙	박영민	박철수	서완석	신근택	양광희	유덕열	이경우	이봉훈	이영광	이종윤	임정규	정권용
박건영	박영수	박치권	서용욱	신동기	양남열	유동진	이경태	이삼열	이영란	이종훈	임종필	정기만
박경애	박영용	박치우	서윤석	신동식	양대규	유동훈	이경호	이상경	이영림	이종훈	임종혁	정남운
박경준	박영철	박태만	서은경	신동조	양대규	유병서	이경훈	이상덕	이영민	이주아	임청민	정덕임
박교영	박영환	박태선	서정일	신동진	양두석	유성하	이경희	이상룡	이영범	이주하	임태영	정명채
박근빈	박용석	박태영	서중대	신동희	양부식	유영춘	이광우	이상민	이영욱	이준길	임희청	정미숙
박기영	박우룡	박한용	서중철	신두철	양비화	유인상	이광섭	이상선	이영음	이준영	장경완	정병석
박기철	박우석	박한호	서직원	신민희	양세용	유인환	이광용	이상수	이영종	이지영	장경태	정병록
박기훈	박원규	박행우	석기영	신봉기	양승두	유일용	이광월	이상엽	이영주	이지혜	장동민	정병순
박남규	박윤희	박현일	석철수	신봉승	양연식	유장연	이광택	이상엽	이영채	이지훈	장민수	정병오
박남수	박은아	박현진	선동수	신상진	양원표	유재민	이광필	이상우	이영현	이진경	장병호	정성룡
박노건	박은준	박형근	설원식	신순봉	양윤숙	유재욱	이광현	이상윤	이영호	이진영	장보름	정석희
박노현	박은현	박형선	설창인	신승연	양인준	유재일	이규용	이상윤	이용근	이진원	장삼기	정선철
박다진	박응순	박호걸	성광식	신승우	양찬우	유재중	이규용	이상진	이용만	이진재	장석림	정선철
박덕룡	박의경	박호영	성금성	신영철	양태훈	유재혁	이규철	이상철	이용배	이창연	장석춘	정선화
박두영	박의용	박홍순	성병화	신영철	양학숙	유정성	이규성	이상필	이용선	이창현	장성순	정성룡
박미나	박이규	박후근	성 신	신완기	엄숙자	유평준	이근식	이상현	이용한	이창호	장승진	정성삼
박미선	박인구	박 훈	성원규	신용규	엄원중	유해신	이근태	이상희	이운항	이창희	장심영	정세진
박민기	박인선	박희영	성윤숙	신은정	엄인수	유항임	이근행	이석교	이운열	이철우	장영달	정세훈
박민정	박재갑	박희돈	성종규	신재원	엄홍길	유희숙	이근환	이석규	이원식	이춘수	장영식	정승상
박민준	박재완	박희령	소경섭	신정무	여병찬	윤건수	이금희	이석기	이원재	이태섭	장영오	정승우
박병근	박재익	박희선	소세영	신지영	여은희	윤경로	이기송	이석범	이원재	이태진	장영환	정승준
박병섭	박재천	반철진	소순창	신철영	여해경	윤경숙	이기우	이석재	이원희	이필생	장옥숙	정승화
박병오	박재교	방상윤	소진성	신현호	여현정	윤대현	이기웅	이석진	이유신	이학수	장유리	정연준
박병일	박정민	방정혜	손건일	심대보	염규석	윤동열	이기중	이선신	이윤규	이한길	장유환	정연준
박상대	박정석	방중수	손우길	심순혁	오동연	윤득구	이기현	이선태	이윤배	이한민	장은미	정연태
박상필	박정석	배만병	손병권	심재형	오상엽	윤상균	이낙원	이성계	이윤상	이한섭	장웅선	정영만
박상성	박정식	배승철	손봉호	심중진	오성택	윤석원	이남경	이성계	이윤호	이현미	장중철	정영식
박상혁	박재호	배영기	손성일	심형보	오세정	윤성권	이다혜	이성구	이은용	이현석	장철기	정영규
박상혁	박재화	배영환	손승태	심후연	오세호	윤성희	이대명	이성규	이은재	이현성	장형환	정영찬
박선희	박종근	배용근	손재운	안규창	오순택	윤숙자	이덕희	이성근	이의영	이현숙	장혜령	정영택
박성배	박종석	배유아	손정아	안기정	오순훈	윤순철	이동근	이성복	이익모	이현재	장 훈	정영화
박성용	박종선	배인명	손종보	안병노	오원준	윤영근	이동석	이성욱	이인영	이형세	장희곤	정은수
박성영	박종소	배정수	손호중	안병준	오일석	윤윤식	이동석	이성재	이일권	이형희	전광호	정원철
박성희	박종수	배중석	손희경	안병화	오창환	윤은선	이동석	이성학	이재강	이호경	전근수	정원철
박성훈	박종원	배화숙	손희준	안상용	오해송	윤의영	이동주	이소영	이재길	이호섭	전대홍	정원희



정윤희	조은숙	최병찬	하현아	황광하	나인수	최윤정	신경화	노영록	전종찬	안송자	고석진	박준기	이정택	김경대	이상기	김건규	박미정	유수연	정중환	기희영	박남규	윤성영	정찬용	김보준	윤종석	
정의정	조은호	최병호	한광덕	황기명	노우승	최정우	신종성	문인철	전대석	양청춘	고영주	박추홍	이창섭	김경호	이상수	김경태	박민관	윤승형	정지선	김경현	박병기	윤영수	정행섭	김보교	이관순	
정의정	조은호	최봉문	한기훈	황도수	노웅래	하상우	안춘훈	박상범	정경수	원경숙	권민호	박태원	이철용	김기석	이상락	김경화	박복임	윤영호	정하준	김광영	박병일	윤원진	정현오	김연고	이덕수	
정인호	조일흠	최석준	한동운	황 민	류성룡		위정희	박상안	조영관	윤도현	권혁중	박한수	이행규	김기종	이상민	김기영	박선애	윤진원	정혜경	김기홍	박상원	이경환	정혜순	김윤희	이명숙	
정일용	조재연	최상실	한상룡	황인호	류중석	☞경실련통일협회	이기자	박익범	조 현	윤성원	김경섭	박희자	이형로	김동명	이상조	김남권	박성배	윤창일	정혜선	김길현	박성수	이동민	정화규	김인수	이미경	
정재은	조재원	최상주	한상훈	황선용	민범기	선월 문산	이명자	백삼균	차부연	윤영호	김민수	반창오	임상열	김만근	이원희	김남현	박성화	윤 철	정희균	김남수	박수인	이상걸	정환승	김인중	이미숙	
정재래	조종철	최성훈	한선아	황신영	박상위	강은석	이우영	백중호		이귀녀	김상천	배동주	장남수	김만규	이정운	김다솜	박승원	이강성	제창록	김동준	박양우	이상동	정찬채	김재훈	이병덕	
정제용	조준범	최수진	한승구	황신준	박성우	고석주	이익현	성호준	강동경실련	이숙희	김석준	배수중	장석주	김상길	이홍근	김동범	박영재	이기영	조경록	김문기	박옥란	이상주	조교영	김종배	이병문	
정종원	조준형	최수진	한승구	황영미	박영웅	고유환	이정호	손창민	☞한일강령통일협동조합	이요한	김선진	백세정	전기봉	김상택	전용범	김복분	박옥남	이말복	조광진	김미남	박인철	이상채	조성식	김종율	이상도	
정주연	조진만	최수영	한승호	황옥분	박인순	곽인환	이정우	송은학	강남일	이윤일	김수진	백승환	정문기	김연옥	정경주	김상옥	박재금	이미선	조은하	김수영	박종렬	이상길	조재근	김준희	이수영	
정주영	조진오	최신애	한용석	황요근	박찬우	김근식	이종인	윤언철	권상동	이제영	김순향	서은옥	정보건	김영화	정병열	김석만	박재철	이미희	조태섭	김양지	박주훈	이승국	주호연	김진익	이시호	
정준수	조준선	최영수	한우진	황이남	박희정	김동범	이진만	이덕호	권오석	이주석	김승권	서주중	정석운	김인수	정병우	김성자	박재희	이병덕	조홍식	김영규	박창기	이승준	지명순	김진희	이영애	
정중식	조준수	최영식	한철희	황이숙	배응규	김동환	이현희	이승훈	김금연	이지은	김승한	손은희	정영현	김정제	정석호	김수진	박정옥	이병렬	주대진	김영길	박창석	이승훈	지창환	김철광	이옥희	
정진민	조태임	최영시	한홍열	황인구	백은정	김민시	이화용	이종하	김남두	이진아	김양곤	손정식	정중화	김종구	정연권	김승복	박종기	이병순	주현자	김영묵	박철용	이 연	차경희	김현미	이원재	
정창률	조현철	최원영	함동균	황정우	서민호	김삼수	임을출	임효창	김동명	장선애	김용운	송미랑	제문규	김철수	정진철	김연옥	박준서	이복자	지연옥	김영환	배용태	이은방	천재영	김휴진	이정진	
정창운	조형준	최원천	함형욱	황정일	신행숙	김성호	임형섭	정길재	김동현	전규화	김원웅	송수영	조병호	김태식	정형호	김영미	박진기	이부순	차성미	김은영	배종국	이인수	천홍식	김희덕	이제수	
정대근	조화현	최유영	허남중	황철진	심영길	김수동	임홍승	정홍준	김봉래	정세환	김윤경	송오성	정대영	김해숙	조덕우	김영미	박춘선	이상봉	최경화	김인수	이재석	최영남	나희철	이종률		
정태영	조희근	최윤재	허병권	황효열	심재민	김우수	장인석	차종석	정의호	김의아	송정일	이창우	조은배	김현근	조봉래	김용길	박혜정	이성숙	최미영	김일호	백 석	이재원	최용석	김호훈	이창우	
정태민	주관수	최윤진	허 석		양우현	김용현	정형원	최재윤	김선연	정의훈	김정주	신미경	조하영	김형기	조영화	김원선	배근식	이성진	최상철	김재석	백영기	이정근	최정규	노상진	이창형	
정대성	주상희	최은진	허수범	☞경실련도시개발센터	오세형	김은수	전미옥	표정호	김선정	정대명	김정훈	신미애	지영배	김형환	최병창	김윤권	변미애	이순재	최철규	김정훈	백익순	이정미	최주영	라병희	이철수	
정대안	주아름	최은철	허여령	강순주	원민철	김정철	전영선	허능식	김은호	정현석	김종태	신 숙	진성우	김홍규	최병철	김윤옥	변한주	이승규	최후식	김종하	백종기	이정학	최준영	류시건	임은기	
정대준	주정운	최인숙	허원철	강준모	유영모	김재기	정동욱	홍창식	김재부	조남환	김종현	신진홍	진희재	김홍기	최상호	김윤재	서방자	이승봉	추규호	김진만	변동철	이창호	하성택	문가야	임주석	
정태철	주찬식	최인호	허익배	고일두	이경수	김재원	정명숙	황은경	김재준	조우현	김창집	안미나	최상주	류창열	최석재	김윤호	서순자	이승희	하숙례	김집중	서민호	이학균	허주아	박경삼	정도익	
정환근	지동익	최정원	허준수	곽 도	이동근	김정진	정명자	황정호	김정근	조영미	김충곤	엄정태	최선종	마태근	최 암	김은자	서용원	이양희	한근희	김철현	서상기	이형모	한 샘	박상우	정문석	
정해석	지정희	최정표	허지영	곽총삼	이만희	김정현	정승훈		김중남	진수환	김홍식	여성범	최상수	문성현	최임석	김은진	서유리	이연숙	한기황	김충식	서정훈	이형호	한신구	박성도	정세광	
정학제	진석수	최종일	허창환	구용현	이명수	김제천	정창현	시민권익센터	김진숙	최규천	김판희	여정애	최상중	박귀룡	최 정	김익찬	서이석	이영신	한창욱	김해룡	선종아	이호진	한원정	박순이	장인철	
정혜경	진영수	최종철	허태현	구자춘	이병준	김진환	조광환	대호관세사법인	김진옥	최복규	김필성	오성관	최암우	박민관	최진건	김종익	서태원	이영희	허기용	김현모	설상욱	임동훈	허기석	박응도	장종길	
정혜순	진유식	최준용	현상두	권영진	이순배	김학성	조성아	김강준	김태희	최상경	김한주	오성주	정해진	진종남	최승권	김한표	육근호	이원영	허정호	김현석	소범환	임영범	허문수	박재욱	장준우	
정혜진	진종남	최승길	현승근	권 일	이양재	김형만	주석부	김석배	김형경	최승길	김한표	육근호	정혜희	최유숙	박종희	김현희	송생욱	이윤식	허준은	김효성	소성만	임형채	허 탁	박주영	정홍성	
정혜희	차은상	최지민	형성훈	김경희	이유미	노귀남	차승주	김태룡	노영성	최순희	김호일	육두표	추현철	반중국	하재훈	김혜숙	송혁호	이재춘	홍경미	나수용	송광운	장시영	황동현	박창재	전호갑	
정희성	채민성	최지한	홍광선	김광만	이은재	당명숙	최교열	나태균	류형춘	최승룡	나기석	육방호	정효진	채병철	최지현	홍대식	김금옥	이재문	류길재	최우진	박병식	박광수	최승준	나양주	육종석	
정희정	채예정	최지훈	홍도천	김기성	이정식	류현정	최호창	박인동	박순남	최은송	남기원	우병훈	조희정	채원호	최창규	홍미미	김대용	이제선	문행규	한광수	서경수	박운남	최재현	남덕희	원순실	
조강희	채원호	최창규	홍미미	김대용	이제선	문행규	한광수	서경수	박운남	최재현	남덕희	원순실	허추구	서경석	강성철	남기표	신성은	이혜진	이호석	☞광주경실련	류이중	신기완	전용준	김요나단	백승호	정택동
조광제	채홍석	최 탁	홍선규	김도영	이창수	박미라	황대중	신희권	박종시	홍용표	남희정	유차상	조광현	천기웅	최태영	홍성현	김동식	이현주	박순장	황지연	유주상	박지호	홍진원	노석현	유현업	
조광희	천기웅	최태영	홍성현	김동식	이현주	박순장	황지연	유주상	박지호	홍진원	노석현	유태영	조규홍	천병우	최호용	홍성훈	김석기	임경수	박용주	☞경제정의연구소	이대순	반태연	황은남	윤길정		
조구홍	천병우	최호용	홍성훈	김석기	임경수	박용주																				
조민숙	천순걸	최홍식	홍순성	김세용	임창규	박용현	김영철	이덕우	배정순	김영철	이덕우	류금렬	윤정미	조병익	최갑주	최홍업	홍순업	김 영	임형백	박은주	김보라	이명근	서은주	☞거제경실련	류영수	이강석
조상호	최광규	최희수	홍순영	김은유	장영진	박주승	곽수근	이순기	송문길	기산종합건설☞	문상필	이광재	조성태	최광현	최희수	홍인표	김재령	전은호	박준우	곽익영	이영길	송민석	윤강원	문철봉	이길중	
조성희	최근목	최희준	홍종학	김재익	정성훈	배인교	구중권	이지연	송재석	강성배	박대기	이미경	조성희	최다정	추동균	홍준표	김정인	정애리	백인용	김동우	이 진	신미영	강애리	박명옥	이신학	
조순열	최덕호	추호현	홍준현	김정철	정인환	백학순	김만환	이창수	신성진	강윤영	박성호	이상귀	조연정	최덕호	추호현	홍준현	김정철	정인환	백학순	김만환	이창수	신성진	강윤영	박성호	이상귀	
조연정	최동민	탁 민	홍진구	김종길	조재형	변상호	김소연	이태호	신승춘	강정숙	박수진	이상용	조영록	최동욱	하상준	홍진호	김찬호	최강림	서관승	김종근	장 영	심규만	강철도	박순옥	이양식	
조영록	최동욱	하상준	홍진호	김찬호	최강림	서관승	김종근	장 영	심규만	강철도	박순옥	이양식	조용기	최명희	하용로	홍창기	김형욱	최두호	손세창	김지환	장진영	심윤보	강학도	박용안	이장명	
조윤정	최병오	하태주	황경복	김호현	최명철	송용석	김 혁	장호죽	심현섭	경명자	박원열	이장표	권성택	이규찬	권혁이	박미영	유부연	정인애	기창선	박광복	윤봉영	정진철	김문환	윤임식		



군산경실련	이상춘	어중석	김대진	박상돈	이덕우	정태완	김 욱	안진주	진동섭	김성두	박근자	신재범	이홍식	최연식	강민수	김동호	김정수	류종성	박진성	손영일	양동열	이상백	임종민	정순영	차진구	
	강왕근	이석진	오인순	김도영	박승철	이도현	정희교	김원희	여일구	차정민	김성철	박나영	신주환	임일용	최영란	강민정	김두영	김정숙	모상선	박진용	손정환	양재화	이상은	임종수	정신모	채종현
	고계근	이선덕	윤영자	김도환	박영식	이미정	조동환	김응배	오세윤	최경훈	김성태	박병철	심재경	임종석	최완수	강병석	김두중	김정순	문영순	박찬일	손철홍	양종필	이상진	임태연	정용수	천경미
	고덕영	이순애	이금순	김도형	박재범	이병화	조락현	김재경	오원관	최봉문	김수경	박석일	안영하	장 미	최윤정	강성권	김명석	김정애	문채현	박창식	손치훈	양지현	이상득	임 호	정우루	천상수
	권희창	이유설	이두열	김동석	박종률	이부용	조용원	김재석	오종섭	최영란	김승호	박성권	안창언	장은경	최 일	강승희	김미향	김종근	민경국	박태순	송승임	오상준	이선희	장경식	정재동	천정호
	김부영	이정익	이부형	김동일	박종익	이상관	조인지	김정기	오학석	최장환	김승환	박성일	양명희	정종국	최재경	강시명	김백철	김종구	민현선	박태주	송은숙	오상환	이성권	장귀봉	정재호	최거훈
	김영혜	이종원	이선주	김영혜	박준상	이상록	조정학	김종구	우금옥	최정우	김신규	박성진	양승희	전종국	최종명	강예운	김범준	김종기	박경은	박한규	송은주	오영자	이성림	장동범	정종학	최경연
	노치우	이춘자	이선화	김무중	박진수	이상용	조찬호	김종찬	우희창	한경이	김영만	박세훈	양영주	전철근	최준길	강유창	김병용	김종민	박경우	박항관	송장섭	오철조	이성림	장문숙	정종화	최남연
	박은아	이해중	이운학	김상돈	박치상	이상천	조창래	김종하	원용철	한선희	김영태	박소영	양의열	박지아	이희재	이재홍	김명하	김종우	박관수	박현욱	송재광	오태성	이성숙	장문정	정지원	최달용
	박은아	이희재	이재홍	김상용	박판기	이상필	주태환	김진숙	유인규	한성림	김영대	박승춘	양진영	심구만	임구원	김정수	김상진	박만년	이상화	차진근	김진중	육종근	한정화	김영환	박수빈	양판승
	심구만	임구원	김정수	김상진	박만년	이상화	차진근	김진중	육종근	한정화	김영환	박수빈	양판승	원유환	장순환	이종기	김석태	박한승	이선희	채오길	김종신	윤석원	한화교	김예영	박소옥	아성준
	원유환	장순환	이종기	김석태	박한승	이선희	채오길	김종신	윤석원	한화교	김예영	박소옥	아성준	이지수	정경조	이종준	김선왕	배은정	이 성	최동학	김태현	윤여진	황의달	김용수	박승채	염애영
	이지수	정경조	이종준	김선왕	배은정	이 성	최동학	김태현	윤여진	황의달	김용수	박승채	염애영	임용선	조용석	조승현	김선희	변부형	이승길	최우곡	김태형	윤주병	김은기	박승선	여규옥	
	임용선	조용석	조승현	김선희	변부형	이승길	최우곡	김태형	윤주병	김은기	박승선	여규옥	정남수	조은정	조용문	김수미	서정걸	이용세	최원아	김태형	윤태희	목포경실련	김 윤	박승옥	여순임	
	정남수	조은정	조용문	김수미	서정걸	이용세	최원아	김태형	윤태희	목포경실련	김 윤	박승옥	여순임	최 우	조재용	조정현	김수원	서정욱	이정수	최은영	김태호	이건희	강병국	김윤정	박영용	오승주
	최 우	조재용	조정현	김수원	서정욱	이정수	최은영	김태호	이건희	강병국	김윤정	박영용	오승주	홍관표	주삼식	조종석	김승환	서종철	이재민	최종만	김태훈	이계자	강병조	김은서	박용목	오은정
	홍관표	주삼식	조종석	김승환	서종철	이재민	최종만	김태훈	이계자	강병조	김은서	박용목	오은정	홍기원	차숙희	주현석	김신호	서창규	이재혁	최준호	김현택	이광자	강성운	김정민	박인웅	오일남
	홍기원	차숙희	주현석	김신호	서창규	이재혁	최준호	김현택	이광자	강성운	김정민	박인웅	오일남	군포경실련	최종식	최일환	김영모	성광기	이종경	최한석	김형태	이문지	강영대	김정우	박정식	오정수
	군포경실련	최종식	최일환	김영모	성광기	이종경	최한석	김형태	이문지	강영대	김정우	박정식	오정수	력키빌딩	하은호	최재용	김용두	손광락	이지영	최순화	김해천	이병소	강제석	김정주	박정희	우진호
	력키빌딩	하은호	최재용	김용두	손광락	이지영	최순화	김해천	이병소	강제석	김정주	박정희	우진호	곡요별	한성수	최상식	김용찬	손상호	이진태	하중호	도남선	이봉호	강주천	김종구	박종두	원오준
	곡요별	한성수	최상식	김용찬	손상호	이진태	하중호	도남선	이봉호	강주천	김종구	박종두	원오준	국정아	호희국	한재혁	김용철	손상훈	이진현	한상우	명을식	이승용	고석규	김종숙	박종철	유경생
	국정아	호희국	한재혁	김용철	손상훈	이진현	한상우	명을식	이승용	고석규	김종숙	박종철	유경생	김대욱	홍순권	허우섭	김윤상	손승완	이진희	한상인	문경재	이영광	고유나	김종익	박주이	유광호
	김대욱	홍순권	허우섭	김윤상	손승완	이진희	한상인	문경재	이영광	고유나	김종익	박주이	유광호	김민형	황윤경	홍석만	김윤호	송승임	이창용	홍희청	박상훈	이영수	고재구	김종호	박찬수	유상보
	김민형	황윤경	홍석만	김윤호	송승임	이창용	홍희청	박상훈	이영수	고재구	김종호	박찬수	유상보	김석현	홍성도	김인환	송영식	이태용	황광석	박성진	이용훈	곽경배	김준형	박창수	윤치술	
	김석현	홍성도	김인환	송영식	이태용	황광석	박성진	이용훈	곽경배	김준형	박창수	윤치술	김연숙	김포경실련	황인문	김재범	신영섭	이해숙	황귀선	박종대	이인세	곽윤경	김창세	박창윤	이경선	
	김연숙	김포경실련	황인문	김재범	신영섭	이해숙	황귀선	박종대	이인세	곽윤경	김창세	박창윤	이경선	김영희	황인순	김정렬	신홍권	이호석	황정현	박종석	이재영	국방현	김정하	박철수	이난희	
	김영희	황인순	김정렬	신홍권	이호석	황정현	박종석	이재영	국방현	김정하	박철수	이난희	김종수	신원센터카	김종웅	심병철	이희동	황종숙	박준혁	이정구	권인철	김준길	박한호	이덕일		
	김종수	신원센터카	김종웅	심병철	이희동	황종숙	박준혁	이정구	권인철	김준길	박한호	이덕일	김종일	명신한의원	김지현	심준섭	이희영	대진경실련	방영덕	이종범	김경철	김태중	박혁진	이도홍		
	김종일	명신한의원	김지현	심준섭	이희영	대진경실련	방영덕	이종범	김경철	김태중	박혁진	이도홍	김창호	김남규	김진숙	김진숙	안영석	임종오	대전경실련	방영덕	이종범	김경철	김태중	박혁진	이도희	
	김창호	김남규	김진숙	안영석	임종오	대전경실련	방영덕	이종범	김경철	김태중	박혁진	이도희	김희모	김문경	감 신	김진호	안정향	장석희	강대현	배동국	이종현	김광배	김하성	박해진	이문희	
	김희모	김문경	감 신	김진호	안정향	장석희	강대현	배동국	이종현	김광배	김하성	박해진	이문희	문상익	김미자	김연환	김창수	안화석	장영규	고제열	백미옥	이창선	김광창	김하현	박호빈	이범수
	문상익	김미자	김연환	김창수	안화석	장영규	고제열	백미옥	이창선	김광창	김하현	박호빈	이범수	박순열	김영로	강호욱	김창완	양대환	장은숙	곽영교	백정용	이학재	김기권	김해민	박홍식	이병재
	박순열	김영로	강호욱	김창완	양대환	장은숙	곽영교	백정용	이학재	김기권	김해민	박홍식	이병재	박영미	김옥순	공영선	김태선	양원규	장철규	구남혁	성기석	이현호	김남식	김홍석	배근미	이상권
	박영미	김옥순	공영선	김태선	양원규	장철규	구남혁	성기석	이현호	김남식	김홍석	배근미	이상권	박윤준	김윤섭	공재식	김태우	염봉훈	장해열	권오택	손대근	이희자	김대근	김희환	배상기	이상호
	박윤준	김윤섭	공재식	김태우	염봉훈	장해열	권오택	손대근	이희자	김대근	김희환	배상기	이상호	박정민	김창집	곽덕환	김태환	여우현	장호경	권철명	송영환	장복수	김명숙	나지애	배영철	이상로
	박정민	김창집	곽덕환	김태환	여우현	장호경	권철명	송영환	장복수	김명숙	나지애	배영철	이상로	박종수	김철경	곽동주	김해철	여은상	장호열	김건희	송인걸	장형근	김명진	노경수	배철선	이세현
	박종수	김철경	곽동주	김해철	여은상	장호열	김건희	송인걸	장형근	김명진	노경수	배철선	이세현	박평식	김형창	곽성기	김현태	여택동	전상훈	김광호	신석민	장화식	김명철	노경운	백재봉	이영춘
	박평식	김형창	곽성기	김현태	여택동	전상훈	김광호	신석민	장화식	김명철	노경운	백재봉	이영춘	박희찬	나기찬	권기억	김환섭	우대윤	전영선	김기수	신수용	전영춘	마용철	백정음	이윤서	
	박희찬	나기찬	권기억	김환섭	우대윤	전영선	김기수	신수용	전영춘	마용철	백정음	이윤서	백교선	남기후	권기혁	남동강	우형택	전재호	김기오	신창호	전학구	김미라	모지홍	서다정	이인수	
	백교선	남기후	권기혁	남동강	우형택	전재호	김기오	신창호	전학구	김미라	모지홍	서다정	이인수	석경수	류문식	남인철	유성호	정경선	김동선	신홍범	정우택	김미주	모창용	서미화	이재광	
	석경수	류문식	남인철	유성호	정경선	김동선	신홍범	정우택	김미주	모창용	서미화	이재광	조인수	심재숙	권오숙	노영희	유영환	정동운	김동인	신희권	정진숙	김미혜	문세영	서이채	이재성	
	조인수	심재숙	권오숙	노영희	유영환	정동운	김동인	신희권	정진숙	김미혜	문세영	서이채	이재성	안종호	박경자	권오준	류규하	유영근	정성운	김문영	신희영	정현재	김민성	문연철	설미심	이정진
	안종호	박경자	권오준	류규하	유영근	정성운	김문영	신희영	정현재	김민성	문연철	설미심	이정진	오태화	박영훈	권윤진	류학근	윤태우	정성호	김병국	안광정	정희대	김민희	문영덕	손영선	이종화
	오태화	박영훈	권윤진	류학근	윤태우	정성호	김병국	안광정	정희대	김민희	문영덕	손영선	이종화	오혜석	박정민	권휘동	맹일영	윤현식	정순천	김상환	안남주	조성천	김민희	문 응	송미승	이찬식
	오혜석	박정민	권휘동	맹일영	윤현식	정순천	김상환	안남주	조성천	김민희	문 응	송미승	이찬식	유병주	박종일	길성민	문인수	윤홍식	정연옥	김승일	안병진	조용태	김상례	문준석	송영중	이창환
	유병주	박종일	길성민	문인수	윤홍식	정연옥	김승일	안병진	조용태	김상례	문준석	송영중	이창환	유숙희	신명순	김강식	박경옥	이강태	정영모	김영기	안영찬	조윤제	김상원	민준준	송진호	이춘엽
	유숙희	신명순	김강식	박경옥	이강태	정영모	김영기	안영찬	조윤제	김상원	민준준	송진호	이춘엽	유애순	신순철	김경민	박동규	이경탁	정영은	김영모	안윤홍	조은호	김상진	민찬홍	송홍범	이평일
	유애순	신순철	김경민	박동규	이경탁	정영은	김영모	안윤홍	조은호	김상진	민찬홍	송홍범	이평일	이경은	심상용	김국태	박동환	이경화	정재근	김영중	안재준	조철휘	김선미	박강일	송희진	이한경
	이경은	심상용	김국태	박동환	이경화	정재근	김영중	안재준	조철휘	김선미	박강일	송희진	이한경	이광석	안재범	김규환	박병준	이근원	정제영	김영주	안종대	조항범	김선실	박광배	신관용	이현중
	이광석	안재범	김규환	박병준	이근원	정제영	김영주	안종대	조항범	김선실	박광배	신관용	이현중	이상운	양영재	김대식	박병호	이노수	정창길	김영희	안종훈	진동규	김선홍	박근영	신우기	이형오
	이상운	양영재	김대식	박병호	이노수	정창길	김영희	안종훈	진동규	김선홍	박근영	신우기														

김법철	박정근	윤택구	전호성	포항경찰서	김익태	손종수	이정미	최홍수
김석중	박형일	윤학로	정의성	(주)제일테크노스	김경수	손진찬	이정은	최병문
김선배	방영열	이관행	정지만	(주)케이알티	김재석	송희연	이지은	최재용
김순옥	방수미	이대범	정종교	화일산기(주)	김재철	양기정	임미진	최정식
김승현	변용환	이복연	정휘든	해광스님	김정혜	양정희	임영숙	최태열
김용재	변좌용	이상섭	조성모	황보원주	김중윤	우홍인	장병화	최희수
김정연	변지량	이상철	조성자	강창성	김준태	유재준	장성숙	태평초
김정욱	석영기	이석원	진장철	공영서	김진두	윤해정	장정선	하승환
김정현	손현기	이승준	최영진	권영준	김진순	이국희	장현수	히대구
김종범	송창근	이원규	최충익	권오일	김태석	이규은	전극중	
김종식	신길호	이은영	최홍규	권태석	김태현	이동철	전정렬	
김준순	신혜숙	이인배	최희수	권태훈	김태희	이동훈	정 휘	
김평안	안호춘	이재진	하상준	김대영	김현철	이상윤	정은미	
김한택	양태식	이종민	한광수	김동완	김현희	이세환	정태문	
김해경	여군자	임재선	한희민	김동환	나창호	이세환	정혜영	
김희성	용성중	전규호	함태성	김문규	남승국	이수열	조동욱	
남형우	윤준형	전근우	함형주	김미경	박성조	이수창	조송이	
박경철	유영호	전동준	허영준	김상수	박영태	이영철	조용석	
박도수	유재원	전만식	황덕호	김성희	박익성	이욱재	조은경	
박미현	윤장혁	전성휘	황윤선	김수구	박정한	이운용	조인호	
박상규	윤재경	전양호	황혜숙	김시경	박종대	이원탁	주경돈	
박상렬	윤재선	전윤성		김용갑	서운기	이익창	지승익	

중앙경찰서

사무총장	766-5626	고계현
기획·홍무팀	741-8566	사무처장: 윤순철, 부장: 채준하, 간사: 권태환
회원·홍보팀	744-0400	간사: 최예지
경제정책팀	3673-2141	팀장: 김한기, 부장: 이기웅
정치입법팀	3673-2145	팀장: 김상수, 간사: 유애지
사회정책팀	3673-2142	팀장: 남은경, 간사: 정태수
국제팀	766-5623	간사: 정의정, 수습간사: 이현아
부동산감시팀	766-9736	부장: 최승섭, 팀장: 김성달(육아휴직)
국책사업팀	766-5628	팀장: 권오인

(사)경제정의연구소	766-5625	간사: 정지영
(사)경찰서민연합회	766-5624	간사: 홍영근
(사)경찰선도시개혁센터	766-5627	간사: 오세형
시민권익센터	3673-2146	팀장: 윤철한
소비자정의센터	765-9732	간사: 박지호
미디어원지	3673-2143	
월간 경찰서	766-5629	이사: 음유정, 김용재

지역경찰서

지역경찰협의회 031-253-2266

광역시

광주경찰서	062-528-4851	처장: 김기홍, 부장: 강경민, 김세현
대구경찰서	053-754-2533	처장: 조광현, 부장: 최은영
대전경찰서	042-254-8060	처장: 이광진, 협동처장: 차정민, 국장: 이현호
부산경찰서	051-761-3951	사무처장 대행: 이훈진
		팀장: 윤정선, 김미라, 간사: 배성훈
		처장: 김승현, 국장: 최해자, 김선희

인천경찰서

032-423-2950

경기·강원권

경기팀	031-253-2266	
광명경찰서	02-2614-1224	국장: 허정호, 부장: 허창순
군포경찰서	031-392-3111	국장: 오은정
수원경찰서	031-253-2266	정책실장: 노건형, 간사: 유병욱
안산경찰서	031-402-6116	국장: 김경민, 부장: 고선영, 간사: 최윤정
인양·의왕경찰서	031-443-6730	처장: 김성규
김포경찰서	031-997-0044	국장: 이종준, 간사: 황인순
이천·여주경찰서	031-635-7575	국장: 주상훈, 간사: 변정혜
강릉경찰서	033-645-0828	국장: 심현식
속초경찰서	033-636-6631	국장: 김경석, 부장: 김미정
춘천경찰서	033-241-9486	처장: 권용범, 간사: 오연옥

충청권

천안·아산경찰서	041-552-2040	국장: 정병인
청주경찰서	043-263-8006	처장: 최윤정, 국장: 이병관, 간사: 김태희, 신명자

경상권

거제경찰서	055-637-9451	간사: 박희자
창원경찰서(준)	055-263-0030	정책위원장: 이지영, 국장: 오정환
경주경찰서	054-773-7851	국장: 이원희, 간사: 방원주
구미경찰서	054-453-1787	국장: 조근래
포항경찰서	054-278-4637	국장: 장정선
울릉지회	054-791-0085	국장: 김유길

전라·제주권

순천경찰서	061-751-9993	국장: 이상희
여수경찰서	061-643-2110	처장: 박효준
목포경찰서	061-283-4571	국장: 장미
군산경찰서	063-443-5733	간사: 최기자
전주경찰서	063-273-4903-4	국장: 한병구, 간사: 권미경
정읍경찰서	063-536-6225	간사: 김은정
남원경찰서	063-633-6662	
제주경찰서	064-726-2530	처장: 최광일